

GOVP1199902693

JB
630.951
L293L

「국민의 정부」 새내각 출범 100일의
농정추진 평가와 과제

1998. 6. 10

贈
寄
김진배
九八年六月十日
農政
贈本

농 립 부

목 차

요 약	3
I. 지난 정부 농정의 반성	17
II. 국민의 정부 100일 주요 농정시책 추진현황	19
1. 「농·소·정」이 협력하는 「열린농정」 추진체계 구축	19
2.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대책 추진	21
3. '98년 4대 농정과제 추진현황	25
4. 100대 국정과제 등 주요 농정개혁과제 실천상황	34
5. 농업분야 통상협력 추진	41
6.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43
7. 농정홍보 및 농림조직 활성화	45
III. 국민의 정부 100일 농정에 대한 평가	47
1. 농림부 자체평가	47
2. 농업인·소비자·언론·학계 등의 평가	56
IV. 향후 과제(주요검토·추진사항)	60
〈 참 고 자 료 〉	
1. 「국민의 정부」 농정평가 설문조사 결과	65
2. 주요 농정기사 모음	81
3. 농업인단체 등의 주요 성명서	97
4. 「국민의 정부」 100일 주요 농정일지	131

여 백

요

약

여 백

I. 지난 정부 농정의 반성

- 42조 조기 투융자 및 15조 농특세 신설 등 농촌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제고 시책을 추진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유통시설의 확충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어느정도 기여

- 그러나 사전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단기간내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또한 규모확대, 첨단시설 설치 등에 치중한 결과 해외자본과 기술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되어 IMF 외환위기 앞에 취약성 노출
 - 외환위기는 수입원자재 사용이 많은 농가(시설원예·축산 등)의 경영수지를 급격히 악화시킴.
 - IMF사태 이후의 고금리 현상, 농산물 소비감소,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부채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농가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

- 한편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기업경영체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우리농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농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 발생
 - “기업농 위주의 정책”, “엘리트 위주의 농정”이라는 비판이 제기

- 농정추진 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국민적 합의형성에 실패

Ⅱ. 국민의 정부 100일 주요 농정시책 추진현황

1. 『농·소·정』이 협력하는 『열린농정』 추진체계 구축

□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농정』 구현

- 농정개혁위원회·유통개혁위원회·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농업인·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참여 및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3.13), 농·소·정 원로회의(5.29) 등 여론수렴을 위한 장관주재 간담회 실시(총 16회)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소비자·유통인·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農·消·商·政』 유통협약 체결 및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 양파(5.8), 축산물(5.26), 우유(5.30), 꽃 생활화 캠페인(5.6)

□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농정』 강화

- 장관이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 행정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이동장관실』운영(17개소)
 - 지역별 : 경기 10, 충남 1, 경북 3, 제주 3
 - 품목별 : 축산 5, 시설원예 6, 과수 2, 환경농업 2, 유통시설 2
- 건의사항 총 106건중 35건을 현장 즉석 해결 또는 1주일 이내에 해결
 - 즉석 해결 15건, 1주 이내 해결 20건, 1주일 이후 해결 19건, 즉석에서 불가통보 12건, 검토후 불가통보 5건, 현재 검토·추진중 35건

□ 농업인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농정』의 실천

-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혁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
- 농업인도 어엿한 경제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계획
 - 51개 농업인단체가 참여, 『농업회의소 설립 발기인대회』 개최(4.29)

2.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대책 추진

□ '98 추곡수매가 5.5% 인상

-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인상('96년 4%)했던 추곡수매가를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5% 인상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의 하향조정

- 농업정책자금(총 11조 1,406억원)의 금리 인상요인 3.5%P중 2%P를 재정에서 흡수(1,790억원), 금리인상을 최소화(8.5 → 6.5%)
- 농안기금, 촉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농림부 소관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97년말 대출잔액 : 6조 1,619억원)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리 유지

□ 저리의 농업·축산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 6,500억원을 더 늘려서 공급('97 : 3.82 → '98 : 4.47조원)

□ 농업정책자금 및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IMF사태로 인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축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상환(5,752억원)을 3~9개월 연장
- 농·축협에서 금년도 상환 상호금융자금(6조원)을 6~12개월 상환연기 또는 대환 조치(이자납부시)

※ 농업인 부담경감 대책 추진으로 총 5,135억원 혜택 부여

□ 농가부채대책 수립을 위하여 농업인단체·학계·정부 공동으로 『농가부채협의회』를 구성·운영중

- 부채대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 밤샘 간담회 실시(5.18~19)
- 앞으로 『농가부채협의회』의 부채조사 결과와 논의내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부채대책 강구

3. '98년 4대 농정과제 추진현황

□ 주곡 자급기반의 확충

-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강화
 -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4.13~4.25) : 230건 적발, 의법조치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및 대체 농지조성비 현실화 추진 :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부처 협의중
 - 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 시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 견지
- 용자수매제 도입 검토 등 양곡관리제도 개선 추진
 -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 및 총리실 제출(4.30)

□ 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 농산물 직거래의 본격 추진으로 성과가 가시화
 - 약 15천회의 직거래 장터 개설, 2,690억원 판매실적 기록
 - 생산자는 23% 정도 높게 받고, 소비자는 22% 싸게 구입
- 재경부와 협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추진(6.1입법예고)
-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수립 추진 : 전문가 간담회 14회 등 실시

□ 친환경농업의 육성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관계부처 협의중
-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추진('99 예산요구 : 83억원)
 - 실무작업단을 구성(6.5), 금년말까지 시행령제정 등 세부방안 확정

□ 수출농업의 육성

- 장관 주재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 정례화 및 『농산물 수출탑 시상제도』 실시 등을 통해 수출현장 애로해소 및 사기양양
 - '98.5 현재 총 38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12건 해소 (26건 추진중)
- 국제박람회에 참가(4회), 1억 3천만불 수출계약('97대비 10.9% 증)
- 수출정보 제공을 위한 「주문정보 서비스제도」, 「Green Bell Service」제 실시
 - 6.8 현재 110건의 주문정보 제공

4. 농정개혁 및 농정조직 활성화 등 추진현황

- 「농정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농정개혁 작업에 착수
 - 그동안 제기된 농정의 비효율과 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새농정의 틀을 정립하고 중장기 농정개혁 방안 마련('98.8까지)
 - 농촌 투융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99 농림예산(안)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위원회 협의중
 - 정원감축 계획 : 농유공 △35%, 농진공 △19%

- 「WTO 차기협상 대책반」을 구성(4.3), 사전 준비작업 추진 및 적극적인 통상협력으로 국익보호
 - OECD 농업각료회의시(3.5~6) 장관이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구본영 OECD 대사에게 지시하여 농업의 다양한 공익성과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료 공동선언문에 반영

-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400억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26억원), 숲가꾸기 사업 확대(395억원) 등 실업대책 적극 추진
 - 6.1부터 서울역 앞에 「농촌 일자리 합동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숙자 등과 농촌의 일터를 연결·안내 (6.8까지 1,748명 상담)

- 농정조직 활성화 및 행정경비 절감
 - 「장관과 사무관과의 대화」(10회), 「이달의 농림공무원제」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장관 자문관의 외부 전문가 임명 등으로 조직활력 제고
 - 해외출장시 비행기 좌석 등급의 1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남은경비 반납

Ⅲ. 국민의 정부 100일 농정에 대한 평가

1. 농림부 자체평가

가. 농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의미

□ 농업중시의 새로운 시대 개막

- 공업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그동안 농업·농촌은 공업이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국민의 정부」는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중시”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대통령 취임사)

□ 농업인과 소비자가 농정의 주체로서 농정에 함께 참여

- “국민(농업인)을 위한, 국민(농업인)이 주인되는, 국민(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추진의 새로운 문화정착

□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제고, 식품의 안전성·품질,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농정 추진

나. 지난 100일간의 농정평가

□ '98.1/4분기중 국민경제에의 농림분야 기여도 분석

- '98.1/4분기중 우리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Delta 3.8\%$ 의 負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농림어업은 4.4% (농업 7.3%)의 성장을 시현
 - 농림어업이 전체 경제성장율을 $0.2\%P$ 끌어올림
- '98.5 현재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6.2%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상승율 : 8.2%)의 안정에 기여
- '98.4월 농림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216천명(8.8%)이 증가하여 고용증대와 사회안정에 기여

□ WTO/IMF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정방향의 정립

- 규모화·첨단시설 위주의 농정이 해외기술·자본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IMF사태 앞에 취약성을 노출시켰다는 반성을 토대로 농정방향 재정립
 -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친환경 농업의 육성, 농산물 수출확대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
 - 대규모 첨단시설을 이용한 기업경영체 중심의 농정에서 우리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에 역점
- ⇒ IMF 경제여건에 적합하고, 우리나라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 「農·消·政」이 협력하는 「열린농정」 체계의 구축

-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과거에 있었던 정부와 농업인단체 등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농업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확립

□ 농정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각계의 합의도출

- 과거와 달리 모든 문제와 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리하게 결론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원칙과 합리성의 기초위에서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각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점
- 그동안 농정개혁을 위한 추진체계와 방향을 정립하는 등 개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농정개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

□ 부담경감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의 경영위기 상황은 다소 완화

-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 부담경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총 5,135억원의 혜택) 긴급위기 상황은 다소 완화
 - 쇠고기, 우유 수급안정, 소비촉진을 위해 「農·消·商·政」 유통협약 체결 및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등 적극 노력
- 「농촌살리기 10대 지원시책」을 당정협약에서 결정(5.18),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 그동안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당정이 해결방향에 합의
 -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과제
- 시설원예·축산농가의 경영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
 - 소의 경우 단순한 큰 수소 수매를 실시, 쇠고기 공급량 축소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 마련이 미흡
 - 우유의 경우 저능력우 도태가 지연되어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원유가격을 오히려 인상하여 수요감소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발생
- 앞으로 유리온실, 축사중 일부 부실경영체를 유형에 따라 내실화 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

□ 농업통상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협상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OECD 농업각료회의, FAO 아·태지역 총회 등에서 식량안보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성과

2. 농업인·소비자단체 대표, 언론·학계 등의 평가(설문조사 결과)

- 국민의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93.2%가 기대) IMF 경제여건 등으로 약속의 일부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대부분 (90.2%)이 응답

- 국민의 정부 지난 100일간의 농정에 대해서는 90.6%의 응답자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 새정부의 농정방향의 적절성, 4대 농정과제의 선정, 『農·消·政』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도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
 - IMF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중 가장 잘한 것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기금금리의 97년 수준 유지」로 조사되었으며, 63.2%의 응답자가 이러한 시책이 농가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
 - 전체 응답자의 95.9%가 김포간척지는 농지로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

- 다만 농정개혁 작업의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잘 모르고 있었으며, 농정개혁작업이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과 관련, 81.1%의 응답자가 반드시 환원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 농정기관·단체의 조직과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7.8%를 차지하였음.

-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중 시급한 것으로는 ①쌀자급 기반의 확충 ②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③농업기술 개발 및 정보화 순으로 응답

IV. 향후과제(주요 검토·추진사항)

□ 주곡자급기반의 확충

- 우량농지보전 강화, 양곡관리제도 개선, 엘니뇨 대비 영농대책 등

□ 친환경농업의 육성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정비
- 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방안의 구체화
-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등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확대

□ 농산물 유통구조개혁 ('98.6까지 개혁방안 마련)

- 직거래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제도화), 도매시장 구조조정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법률안에 직거래 지도·감독 규정, 공산품을 취급대상 품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농촌살리기 10대 지원시책」 등 농업경영 안정대책의 추진

- 첨단시설농가의 기술·경영의 혁신 등 농업경영의 내실화
- 농가 유형별 부채 경감대책의 강구
- 소·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추진

□ 협동조합 개혁('98.7까지 개혁방안 마련)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 조합간 합병문제

□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개혁

- 기관·단체별 조직 및 인력의 축소 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등

□ 중장기 「농촌발전대책」 수립과 투융자제도 개선('98.8 확정)

- 주요 분야별 개혁과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중장기 투융자 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부」 새내각 출범 100일의
농정 추진 평가와 과제

여 백

I. 지난 정부 농정의 반성

- 지난 정부에서는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 42조 조기 투융자 및 15조 농특세 신설 등 농촌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제고 시책을 추진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유통시설의 확충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어느정도 기여

- 그러나 사전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단기간내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과잉수요를 유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
 -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형식적인 사업심의와 일부 나누어 먹기식 사업자 선정 등으로 부적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후 관리의 부실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도 발생
 - 일부 영농법인들은 보조지원만을 바라고 급조되어 경영부실 및 자원낭비 초래

- 또한 규모확대, 첨단시설 설치 등에 치중한 결과 해외자본과 기술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되어 IMF 외환위기 앞에 취약성 노출
 - 값이 싼 해외 수입사료와 에너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외환위기는 수입원자재 사용이 많은 농가(시설원예·축산 등)의 경영수지를 급격히 악화시킴.
 - 또한 과도한 시설투자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IMF사태 이후 고금리 현상, 농산물 소비감소,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부채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농가부채가 사회 문제로 대두

- 기술·경영능력이 취약한 농가·법인경영체의 도산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이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농업외부로부터 농촌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

- 한편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기업경영체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우리농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농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 발생
 - “기업농 위주의 정책”, “엘리트 위주의 농정”이라는 비판이 제기

- 외형적인 유통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불만 초래
 - 직거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으며 산지·가공 등 분야에서의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취약
 -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운영의 불합리성 등 고비용 구조로 유통마진을 절감하는데 미흡

- 주곡자급을 표방하였으나 자급기반인 농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매년 농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 발생
 - 숙박시설·음식점 등이 난립하는 국토의 난개발 현상도 초래

- 농정추진 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국민적 합의형성에 실패
 - 정부와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으로 개방화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역량결집 미흡

II. 국민의 정부 100일 주요 농정시책 추진현황

1. 『農·消·政』이 협력하는 『열린농정』 추진체계 구축

농업정책 입안단계부터 농업인과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주는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을 통하여 『열린농정』을 본격 실시

□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농정』의 구현

- 정책입안·기획단계는 물론 집행단계까지 농업인·소비자 참여 확대
-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농업인, 시민,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 및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28명, 3.26 구성)
 - 공동위원장 : 농림부 차관, 서울대 김호탁 교수
 - 위 원 : 정부 4, 농업인단체 10, 소비자대표 4, 학계 8명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위원 30명, 3.19 구성)
 - 공동위원장 : 농림부 차관보, 서울대 김완배 교수
 - 위 원 : 정부 7, 생산자단체 5, 소비자단체 3, 유통업계 대표 7, 학계 및 전문가 6명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 20명, 4.13 구성)
 - 공동위원장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협동조합연구소 황민영 이사장
 - 위 원 : 정부 3, 농업인단체 등 10, 학계 5명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3.13), 농·소·정 원로회의(5.29)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장관주재 간담회 실시(총 16회)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소비자·유통인·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農·消·商·政』 유통협약 체결 및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 꽃 생활화 캠페인(5.6), 양파 (5.8), 축산물 (5.26), 우유 (5.30)

□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농정」 강화

- 주말을 활용, 장관이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 행정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이동장관실」 운영
 - 3월 8일 안성지역을 시작으로 총 17개소 현장방문 실시
 - 지역별 : 경기 10, 충남 1, 경북 3, 제주 3
 - 품목별 : 축산 5, 시설원예 6, 과수 2, 환경농업 2, 유통시설 2
- 건의사항 총 106건중 35건을 현장 즉석 해결 또는 1주일 이내에 해결
 - 즉석 해결 15건, 1주일이내 해결 20건, 1주일 이후 해결 19건, 즉석에서 불가통보 12건, 검토후 불가통보 5건, 현재 검토·추진중 35건

□ 농업인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농정」의 실천

-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혁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민간과 경합되는 물류센타, 직판장 등을 매각하고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개편 (인력은 약 35%수준 감축)
 - 농어촌진흥공사의 인력을 19%수준 감축하고, 농조·농조연의 기능 재조정과 조직의 효율화 추진
- 농업인도 어엿한 경제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계획
 - 농업인단체 등 51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농업회의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4.29)
 - 농업인단체가 자율·자조정신에 입각하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방안 검토

2.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대책 추진

가. IMF사태가 농업경영에 미친 영향

- 농업자재 수급불안과 현금거래 요구 등으로 적기 구매 애로
 - 은행의 L/C개설 제한, 가격상승을 기대한 가수요 발생, 현금거래 요구 등으로 실수요자의 자재 구매에 애로 발생

- 자재가격의 상승과 고금리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
 - 주요 농자재가격 상승률('97.11~'98.6) : 농약 36.1, 비료 30, 배합사료 26, 면세유류 10.5(외환위기 직후 107%까지 상승), 농기계 8.5%
 - 금리 상승으로 추가이자 부담이 발생
 - ⇒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크고 시설투자 규모가 큰 축산 및 시설원에 농가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축산물, 과채류 중심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 약세 시현
 - 쇠고기·과채류 등은 경영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 어려움

나.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 GSM-102 자금확보 등을 통해 원료곡물 수급애로 해소 지원
 - 원료곡물 등 L/C개설 지원 : 851백만불 (농·축협 351백만불)
 - 원료곡물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외화자금 확보
 - 미국의 GSM-102 자금사용 합의 : 1,060백만불
 - 호주 및 캐나다 수출 신용자금 등 : 198백만불

□ '98 추곡수매가 5.5% 인상 및 수확기 벼 매입량 증대

-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인상('96년 4%)했던 추곡수매가를 IMF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5.5% 인상

※ 보리도 '94년 5% 인상후 4년만에 처음으로 수매가를 5.5% 인상

- WTO 협정에 따라 수매가 인상으로 '98 정부수매 계획량은 감소하였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매입 등을 위한 운영자금을 늘려 정부와 RPC의 전체 벼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2만석 수준이 더 늘어나도록 할 계획임.

- 정부수매량 : ('97) 850 → ('98 P) 770만석 (△80만석)
- RPC 운영자금 지원 : ('97) 2,180 → ('98 P) 2,710억원 (24.3% 증)
- RPC 벼 매입 : ('97) 558 → ('98 P) 650만석 (92만석 증)
- 정부+RPC 벼 매입 : ('97) 1,408 → ('98 P) 1,420만석 (12만석 증)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의 하향조정

-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농특회계 등의 농업정책자금(총 11조 1,405억원)의 금리 인상요인 3.5%P중 2%P를 재정에서 흡수, 금리인상을 최소화 (8.5 → 6.5%)
 - 2%P 금리인하를 위한 소요예산 1,790억원을 '98추경예산에서 확보
- 농안기금, 촉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농림부 소관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97년말 대출잔액 : 6조 1,619억원)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리 유지
- 농림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융자지원 (총 1,939억원)

□ 저리의 농업·축산경영자금 등을 대폭 확대 공급

- 농업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저리의 농업·축산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 6,500억원을 늘려서 공급중
 - 농업·축산경영자금 : ('97) 3조 8,200억원 → ('98) 4조 4,700억원
- 유류 구입자금 등 긴급운전자금 지원 : 3,048억원

□ 농업 정책자금 및 농·축협외 상호금융 자금 상환기간 연장

- IMF사태로 인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축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상환(5,752억원)을 3~9개월 연장
 - 축산분야 5,707억원, 시설원예 분야 45억원
- 농·축협에서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4조원) 상환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 조치 (이자납부시)
 -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2조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6~12개월 유예 조치

— <추가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구> —

- 농가부채 대책 수립을 위하여 농업인단체·학계·정부 공동으로 『농가부채협의회』를 구성·운영중
 - 부채대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 밤샘 간담회 실시 (5.18~19)
- 앞으로 『농가부채협의회』의 부채조사 결과와 논의내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부채대책 강구
 - 농업인 단체등과 공동으로 부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대책을 수립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 추진 ('98.5.18 당정협의회시 결정)

- ①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
- ②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되 통합기관의 도단위 지소는 도별로 1개소씩 9개소, 시·군 출장소는 주요 시·군별로 118개소를 두고, 중앙 통합기관의 장은 현행대로 1급으로 유지
- ③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부채협의회」를 설치, 유형별 부채대책 강구
- ④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707억원의 상환을 3개월 연기
- ⑤ 농특세는 가급적 존치하되, 세제종합개편의 일환으로 본세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15조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
- ⑥ 소수매는 UR/WTO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계속 실시하고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송아지 가격안정대책과 병행 실시
- ⑦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우유 및 분유소비 촉진대책을 적극 추진
- ⑧ 농산물직거래 지원조항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연내에 제정
- ⑨ 김포간척지는 당초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사용
- ⑩ 농업인단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예산조치를 비롯 농업 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

3. '98년 4대 농정과제 추진현황

가. 주곡자급 기반의 확충

□ 우량 농지보전 시책의 강화

-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 (4.13~4.25)
 - 총 230건(23.9ha)의 불법전용을 적발하여 고발 3건, 원상회복명령 207건 등 조치
-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내에서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경지정리·용수개발 여부를 감안, 대체 농지 조성비 현실화 추진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중
- '97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지조사 실시(4.20~6.5)
-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시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 견지
 - '98.5.18 당정협의시에도 「김포매립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쌀 생산의욕의 고취와 양곡관리제도 개선 추진

- '98년산 추곡 약정수매가 5.5%인상 결정 (3.25)
 - '98 추곡약정 수매계획량 770만석 전망에 대해 약정체결 완료 및 선금 지급(7,002억원) 등 수매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 용자수매제 도입 검토 등 양곡관리제도 개선 추진
 - 추곡수매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4.22)
 - 생산자단체,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
 -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국무총리실 제출 (4.30)
 - 토론회 등 의견수렴(6~7월)과 관계부처 협의후 최종안 확정 ('98.11)

3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 지원

□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생산 종합추진본부」 설치 (3.9)

- 엘니뇨 대비 영농교육, 벼 재배면적 확보, 고품질 다수확 품종 공급 등 종합관리·지도
- 종자·비료·농약 등 영농자재의 원활한 공급
 - 정부보급종 벼종자 공급 : 12,620톤 공급 완료 (전년대비 3% 증)
 - 비 료 공 급 (6.8현재) : 1,089천톤 공급(전년대비 13% 증)
 - 농 약 (5.20현재) : 6,870톤 확보 공급중(전년소요량 대비 5% 증)
- 봄철 『농번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3.17~4.16)
 - 7개 농기계 제조업체 합동운영 : 수리차량 52대, 107명
 - ※ 농기계 긴급 고장수리반 편성운영(5.1~31) : 5개업체, 88대 200명/1일
-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중 (5.1~6.30)
 - 농림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에 『일손돕기 지원창구』 설치·운영
 - 6.5현재 194천명이 8,719ha에 대해 작업실시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모내기는 순조롭게 완료단계에 있으며,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

- 벼 재배의향면적(4.15조사) : 1,071천ha('97재배면적 대비 19천ha 증)

□ 엘니뇨 현상에 대비한 영농대책 강화

- 최근 이상고온 등으로 벼의 초기생육에 피해를 주는 벼 물바구미 등 해충이 많이 발생
 - 벼 물바구미 채집량이 전년의 3배 수준
- 장마기간중 비가 자주 올 경우 도열병 및 벼멸구의 발생이 많을 전망

- 이에 대비하여 병충해 및 가축질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해충 방제대책 상황실」을 설치(6.1)하여 병해충 정밀예찰과 소요농약 사전확보 등 영농대책을 강화
 - 병해충 예찰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및 대책강구
 - 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을 들녘별로 적기방제일을 정하여 공동방제를 실시, 방제효과 제고
- 여름철 저온으로 인한 만일의 냉해에 대비한 영농교육·홍보지도 강화
 - 냉해에 강한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재배권장 (기 실시)
 - 질소비료 과다사용 억제 등 시비지도 강화
 - 여름철 저온현상 발생시 물을 깊이대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추진

보리 특별 수매대책 추진

- 5월 초순의 계속된 비와 이상고온으로 유숙기의 보리에 붉은곰팡이병이 갑자기 확산되어 피해 발생
 - 전체 보리 재배면적 82천ha 중 약 47%(39천ha)에 발생하였으며 물빠짐이 더딘 전북의 논보리 재배지역이 가장 심함
 - ※ 이러한 현상은 지난 '74년(재배면적의 70%인 49천ha 발생)이후 24년만에 처음
- 농업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기수확 및 영농지도 적극 추진
 - 6.8 현재 전체 보리면적의 99%(83천ha)에 대해 수확 완료
 - 붉은곰팡이병 피해보리 수매 및 안전성 확보방안 관련회의 (5.23)
- 현행 수매가격 미달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잠정 等外규격을 설정하여 정부수매 실시계획
 - 보리수매 계획 : '98.6.20~7월말
- 붉은곰팡이 병에 감염된 보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중인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사용방안 결정계획

나. 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 농산물 직거래의 본격추진으로 성과가 가시화

- '98.6.4 현재 총 14,650회의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2,690억원의 판매실적 기록
 - 직거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거래 추진상황실」 설치(3.19), 직거래 추진협의회 개최(3.20), 직거래 발전을 위한 간담회(5.13) 등 실시
 - ※ 정부 과천청사앞에 직거래 시범장터 개장(4.17) : 매주 금·토요일
 - 도매시장 경유시에 비해 생산자는 평균 23% 높게 받고 소비자는 22% 정도 저렴하게 구입
- 식육 이동판매 허용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안 입법예고(4.4~4.23) 후 법제처 심의중
- 이러한 노력으로 직거래 비중이 증대 : ('97) 5 → ('98.5) 11%

□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추진('98 정기국회 법률안 제출 예정)

- 재정경제부의 법률안 시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 추진(4.23)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거래 지원조항 신설
 - 농산물직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 미반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입법 예고(6.1)

□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물류센타」 개장('98년중 4개소)

- 양재동(3.26), 창동(5.1 임시개장)은 기 개장하였으며, 청주는 9월, 부산은 10월에 각각 개장예정

□ 농산물 전자상거래기반 확충

-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 코드·거래서식의 표준화 방향 등 실무협의회 개최(3.31)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간담회 개최(4.23)
 - 농협, 마이더스동아 등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 협의

□ 단위농협 통합협 추진 등으로 산지농협의 농산물수집기능 강화

- 단위농협수 : ('98.2) 1,239 → ('98.5) 1,222개소 (△17개소)
- 수집상 점유비율이 높은 채소류의 농협계약재배 확대
 - 농협계약재배 실적('98.5) : '98 계획 354천톤중 130천톤(37%) 계약 완료(봄 무·배추 22, 고냉지 무·배추 103, 고추 1, 당근 4천톤 등)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수립 추진상황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3.19), 유통개혁작업 착수
 - 유통개혁위원회 전체회의 2회, 실무대책단 전체회의 3회, 작업반별 대책회의 및 전문가 초청간담회 14회 등을 개최하여 유통개혁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주요 논의내용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물류센타등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 절감 등 유통단계축소 및 유통경로 다양화
 -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고비용 구조타파, 공정거래질서 정착 등 도매시장 개혁
 - 산지유통혁신 및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등
 - 농산물 물류체계의 개선 : 물류표준화, 물류정보망 구축 등
-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8.6월까지 유통개혁대책 확정

다. 친환경농업의 육성

□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4.29~5.9)후 입법예고 추진중
 - 환경농산물표시제 운영,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조사 등의 구체적인 실시방안 규정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98.12.14)에 차질이 없도록 '98.11월까지 공포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추진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5.6), 간담회(5.15) 등을 거쳐 실시 기본방향 정립(5.22)
 - 환경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기존 유기농업 및 저투입 농업(LISA)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시행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하는 방안 추진중
 - '99년도 예산(안)에 83억원(15.4천ha, ha당 524천원) 요구
- 세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6.5), 금년말까지 시행령 마련 등 작업완료 계획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대책 추진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農·消·政 간담회 실시(3.13)
 -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생산·유통 지원방안 등 협의
- 환경농산물 판매장 확충 및 구매자금 지원계획 수립(5.28)
 - 농협 하나로마트에 전문코너 확대 설치 추진 : ('97) 18 → ('98) 62개소
 - 구매자금지원 확대 : ('97) 8억원 → ('98) 30
- 환경농산물 판매장 신규설치 '99 예산요구 : 10개소 (30억원)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기술확산을 위한 친환경(IPNM) 시범마을 조성계획 등 수립 (5.28)
 - '99 시범마을 16개소를 조성, IPM, INM 기술확산 도모('99예산요구 : 6억원)
- 민간 토착 기술현대화 등 환경농법·자재개발 추진
 - 친환경농법 및 자재검증 추진협의회 개최(4.9)
 - 민간에서 사용중인 토착 환경농업기술(16건)에 대한 검증계획 수립(4.11)
- 토양개량사업 등 흙살리기 운동 지원
 - 토양개량제 확대 공급 : ('97) 438 → ('98) 586천톤('98.5까지 457천톤)
- Codex 제26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우리의 입장 반영(5.23~29)
 - 축분비료를 구입·사용한 경우의 유기농산물 인정범위를 확대

□ 국내 부존자원 활용 및 자원절약형 농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시달(3.13)
 - 초지조성, 벧짚수거용 기계 공급 등을 위해 총 400억원 지원
 - 농업회사법인 등을 통한 벧짚이용 시범사업 추진 : 20개소(6억원)
 - 우수농민·지자체에 대한 시상 및 농업자금 우선지원
- IMF시대의 조사료대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4.10)
- 조사료 생산촉진을 위해 초지관리절차를 간소화 : 초지법시행령 개정(4.11)
-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적극 추진
 - 남은 음식물 사료화발대식 참가 및 장관치사(3.19)
 -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중 : 10개소, 23억원(자금배정 완료)

□ 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현장에서 환경농업을 지도할 전국 농촌지도소장 교육 실시(4.30)
 - 환경농업정책에 대한 장관특강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실시
- 신문기고, 방송, 현장교육 등을 통한 환경농업확산 홍보 실시(총 28회)

라. 수출농업의 육성

- 장관주재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 정례화와 「농림산물 수출탑」 시상제도 실시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장관주재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 개최(제1차 회의 3.31)
 - 생산농업인, 수출업체, 관련기관, 단체대표 등을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논의
 - 농산물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선도적 역할을 한 자에게 수출탑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3.31)하여 수출의욕을 고취
 - 수출탑(9) : 금탑 3, 은탑 3, 동탑 3명(특별상 3명, 장관표창 14명 실시)
 - 「농산물 수출대책 상황실」 설치 및 「농산물무역확대 대책팀」(팀장 : 차관보)을 구성(4.29)하고 매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애로 발굴·해소
 - 품목별 대책반(8개)을 운영, 품목별 수출입동향과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강구
 - '98.5말 현재 총 38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12건 해소(26건은 추진중)
 - (예) 매 수출시마다 하던 종자 수출검역을 동일품종, 동일 lot의 경우 1회 검사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육성('98누계:88개소)
 - '98 수출전문단지 14개소 신규지정('98.2~3) : 화훼 2, 과수 12개
 - '98.6월중 채소 수출전문단지 신규 2개소 지정계획
 - 20대 수출전략 농산물을 선정하고, 수출전략 농산물에 대한 「전문연구팀」 구성·운영(3.4)
 - 20대 수출전략 농산물 :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사과, 배,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호박, 채소종자, 선인장, 백합, 장미, 홍삼, 백삼, 밤, 송이버섯, 표고버섯
 - 전문연구팀 구성 : 농진청, 산림청, 유통공사, 식개연 등 9개 기관

□ 민관합동의 해외시장개척사업 적극 추진

- 국제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 수출농산물 일본특별기획전(3.10~3.13, 73개업체 270개품목, 수출계약 76,966천불), 싱가포르 식품박람회(4.14~17, 8개업체 81품목, 수출계약 : 5,104천불), 시카고박람회(5.3~6, 18개업체 90품목 수출계약 10,142천불)
- ※ '98.5 현재 수출계약 : 330건 102,986천불('97 대비 10.9% 증)
- 동남아 과일 수출촉진단 파견(4.5~11, 유통공사 등 4명)
 - 신고배 190톤(21.5만\$) 수출계약 : 인도 108, 싱가포르 52, 일본 30톤증
- 주요 품목별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전문가 대책회의 개최(12회)
 - 돼지고기(4.25, 4.27), 과일(3.19, 28, 4.3), 화훼(3.21, 25, 27, 4.3), 양파(3.23), 김치(5.15), 채소류(5.21)

□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주문정보서비스제도」 실시('98.6)

-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이 원하는 정보를 조사하여 PC통신, FAX, 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98.4월부터 시범운영)
 - 6.8 현재 110건의 주문 정보 제공
- 해외 바이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해외바이어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Green Bell Service」 실시(5.1부터)
 - 12개국 40명의 바이어와 정보교류중

□ 농산물 수출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 보상비율 상향조정, 보험료 지급기한 단축등 협의중(수출보험공사)

4. 100대 국정과제 등 주요 농정개혁과제 실천상황

가. 농정개혁의 추진

- 그동안 제기된 농정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새농정의 틀을 정립하고 중장기 농정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 설치(3.26)

<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 >

- 농촌 투융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5.8, 제2차 농정개혁위원회)하여 '99년도 농림예산 요구안에 반영
 - 총 25개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별 투융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 과잉소요 유발사업, 보조금이 과다하여 적격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사업 등을 보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로 전환하거나 예산규모를 축소(예 : 농기계공급, 가공산업육성, 농공단지조성 등)
 - 주곡자급, 유통체계개선, 친환경농업, 수출, 농업경영안정 지원 등의 예산지원을 확대
 -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포괄보조금 예산(지역특화사업) 확대
 - 특히, 유리온실·축사시설 등 사업의 내실화를 중점 추진
 -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운영자금 지원과 기술·경영교육 강화 등 운영의 내실화 중점
 - 농업인의 자율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도』 시범 도입
 - '99 예산요구안에 원예·축산분야 종합자금 시범사업 실시예산(200억원)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 예산도 요구(9억원)

- 농업인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여 주요 분야별 구체적인 개혁방안 논의
 - 저투입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경영혁신을 선도할 농업 경영주체 육성, 농업기술혁신 추진체계 개편, 농촌지역 종합개발 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 실무협의회(6.13)를 개최, 주요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
 -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식량안보 강화, 농업생산 및 유통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수출농업육성을 통한 농업활로 개척, 21세기 대비 농업통상·통일농정 대비, 농업인 교육·의료·연금·복지 확충 방안 등
- 제3차 농정개혁위원회 개최 (6월말)
 -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친 주요농정 과제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농정개혁시안 마련
- 제4차 농정개혁위원회 개최(7월말)
 - 협동조합·농산물 유통제도 개혁방안을 포함한 농정개혁위원회 최종 개혁안 마련
- 공청회·토론회 개최 및 농업·농촌발전대책 확정(8월)
 -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업·농촌발전대책 확정

나. 협동조합 개혁

- 농·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를 농업인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식 협동조합으로 재편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4.13), 개혁작업 추진

<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 >

- 2차례의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실무작업단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대상 과제와 개혁방안을 논의

- 실무작업단의 개혁안 작성 및 협동조합개혁위원회 토의(6.9)

□ 주요 과제별 논의내용

- 협동조합 구조조정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 품목별·업종별 연합회 기능 강화, 단계적인 자회사화 추진 등 중앙회의 조직체제 정비
 -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이종조합 (농·축·임협)간 합병 문제 등 회원조합 조직체제 정비
-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개선
 -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문제, 부실조합 정리방안, 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등
- 협동조합 지도·감독체제 개선
 - 조합내부감사,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도·감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 공청회 개최(6월말)

-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개혁안 수정보완

□ 협동조합개혁방안 최종(안) 마련(7월중)

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수립(100대 국정과제 포함)

- 농림부 소관 10대과제 (세부과제 기준 64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안을 수립,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4.18)
 - 주곡자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구조조정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등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작성
- 기획예산위원회 및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6월중순 확정 계획
 - 6.8현재 기획예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협의중

라.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중

< 경영합리화방안 주요내용 >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국영무역 등의 기능도 계속 수행
 - 현재 948명인 정원을 금년말까지 약 35% 감축
 -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직판장은 금년중 매각하고 화훼공판장도 생산자단체에 이관
 - 부실한 해외농업 무역관을 정비하고, 법적지위를 별도법인에서 해외사무소 형태로 전환
 - 한국물산은 자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하고 매일유업 지분도 매각
 - 수출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표준화등 유통 지원 사업을 효율화

□ 농어촌진흥공사는 주요 국책사업 대행, 민간수행이 어려운 비수익사업, 고급기술분야를 역점 추진

- 현재 2,478명의 정원을 약 19% 감축하고 조직도 축소 정비
 - 조직개편안 : (현행) 5본부, 20처(실), 9지사, 7사업단, 83지부 → (조정) 4본부, 17처(실), 9지사, 5사업단, 65지부
 - 농업인단체의 대표를 농진공의 이사로 임명하는 방안 검토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조사, 설계, 감리업무는 민간에 이양
- 부서별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80→150%)하고 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제도 도입
- '99년부터 상위직급부터 연봉제 도입

□ 타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조직도 인력을 농진공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사기능 및 조직 통폐합과 효율화 방안 강구

—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 —

- 54개 단체가 참여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 추진위원회』 구성(4.23)
- 당정협약에서 마사회의 농림부환원 절차를 금년내에 마무리하기로 결정 (5.18)
- 국회의원 34명이 마사회 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5.21)
- 농업관련 62개 단체가 『마사회의 농림부환원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개최 (5.27)
 - 6.8 현재 국회의원 97명 동의서 제출, 총 13만명 서명

마. 소·우유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소 >

□ IMF 영향으로 쇠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소값이 계속 약세

○ 소값(500kg기준) : ('97.5) 2,421 → ('98.5) 2,097 → (6월초) 2,095천원

※ 소 수매를 제외한 실제 시중가격은 190만원 수준

○ 금년도 쇠고기 수급은 공급이 수요(317천톤)를 약 83천톤 초과 전망

□ 그동안의 소값 안정대책 추진상황

○ '97.1부터 4,840억원을 투입, 168천두의 소수매 실시

- '98.2부터는 축발기금이 소진되어 농협(570억원, 금리 16%), 축협(1,300억원, 금리 17%)에서 자금을 차입·운용중

- WTO 규정상 금년도 수매가능 두수는 109천두로 '98 수매실적(68천두) 감안시 금후 수매가능 두수는 41천두

○ 배합사료 가격인하(2회) : '98.4월 Δ 4.2%, '98.6월 Δ 3.0%

○ 쇠고기 소비확대 추진

- 수매육을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 소비자가격 하락 유도

- 군납 쇠고기의 50%를 금년 4월부터 한우로 대체('98계획 : 15천두)

- 「農·消·商·政」 유통협약 체결(5.26) 및 축산물 브랜드전 개최(5.29)

□ 쇠고기 공급감소 등 수매제도 개선 검토·추진

○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 중수소 병행 실시

○ 현행 정가수매를 시가수매로 전환

< 우유 >

□ IMF 영향으로 인한 소비감축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여 분유재고가 급증

- 분유재고 : ('97.12) 7 → ('98.2) 12 → ('98.5) 16천톤

□ 그동안 우유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 젖소 저능력우의 자율도태 추진
 - 축협등 낙농단체와 협의, 시·도별 목표량 설정 · 시달(5.28) : 30천두
- 원유 체세포수 3등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여 원유가격 인하 효과
 - 체세포수 3등급 : (현행) -30원 → (개정) -60원/kg
- 「農·消·商·政」 유통협약체결 및 우유 소비촉진 결의대회 개최(5.30)
 - '98.3부터 우유소비 캠페인 전개 및 리후렛(15만부) 등 배포
- 분유재고 감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실시(4~5월) : 96톤

□ 앞으로 우유공급 감소 및 소비확대시책 추진계획

- 젖소 지육수매를 한시적으로 실시, 젖소도태 촉진
 - 한우가격의 60%를 밑돌 경우 한시적으로 시가수매
-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우유가격 인하 추진
 - 유업체 · 조합으로 하여금 시유가격을 5~10% 수준 자율인하 유도
- 소비비중이 큰 소포장 우유의 포장용량을 증대하여 소비확대 유도(200ml → 210ml)
- 분유재고 소진대책의 지속적 추진
 - 식품 · 유업체에 재고분유 사용 알선 및 협조요청
 - Unicef를 경유한 대북 분유지원 추진 : 600톤 이상

5. 농업분야 통상협력 추진

□ 「WTO 차기협상 대책반」을 구성(4.3), 사전 준비작업 추진

- WTO 차기 농업협상 준비를 위한 논의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
- 농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대표 등으로 차기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실무지원단 회의(4.9), 통상정책 협의회(4.20) 등을 개최
 - 차기협상 관련 주요국의 논의 동향과 예상과제에 대한 분석
 - 과제별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검토

□ OECD 농업각료회의(3.5~3.6)에 적극 대응, 우리입장 반영

- 장관이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구분영 OECD대사에게 지시하여 농업의 다양한 공익성과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료 공동선언문에 반영

□ FAO 아·태지역 총회 참가(4.21~25), 아·태 농업협력 강화

-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곡 자급이 필수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조하고, 최근 우리나라 농정개혁과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혁 등을 적극 소개
-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표와 면담을 통해 WTO 차기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요구 논의 등에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합의
- FA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북지원 및 한국인의 FAO 진출 등을 적극 협조키로 합의

□ 제2차 WTO 각료회의(5.18~20)시 농산물 수입국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 반영

- 농업분야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조기에 개시하자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을 저지
- 각료선언에 농업분야만이 차기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차기협상을 위한 준비작업 논의를 WTO 일반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입장 반영

□ 외국의 농업통상관련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대외통상정책의 신뢰도 제고

- 주요 면담인사(장관) : USTR 부대표 및 주한미대사(3.7), 호주 1차산업 및 에너지성 장관(3.13), 칠레 농업장관(4.6), 캐나다 농업장관(4.16), 이스라엘 농업장관(5.7) 등
- 한국농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난 10년간 한국은 가장 빨리 광범위하게 시장개방을 추진하였으며 다자 및 양자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대외 신뢰기반 구축
- 현안사항이었던 한국산 배의 캐나다 수출재개 등 수출애로 해소에도 기여

□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을 위한 원탁회의(Roundtable)에 참가(5.28~29), 북한지원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을 참여국들에게 (19개국, 10개 국제기구, 10개 NGO) 인식시킴.

- 최근 민간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사례를 설명하고 남북한간 농업 협력협의회 구성을 제의
 - 남북한 당국간 직접대화를 통해 영농자재, 기술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측은 긍정적인 입장임을 UNDP측에 통보

6.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실시(400억원)

- IMF사태 이후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크게 증가
 - '97년에는 월평균 귀농자가 152 가구에 불과했으나 '98년 3월에는 698가구, '98.4월에는 1,429가구로 빠르게 증가
 - '98.1~4월중 귀농가구수 : 2,713가구
- 귀농희망자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안내 및 교육실시
 -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귀농안내 코너 개설 및 농림부, 농진청, 농촌지도소 등에 귀농상담실 설치 운영(162개소)
 - 영농기술등 교육실시(농진청, 농협, 귀농운동본부)
 - ⇒ '98.6.8 현재 실적 : 귀농상담 9,315, 영농교육 신청 4,693명
- 귀농창업자금 특별융자지원 실시 : 400억원, 2,000가구
 - 지원대상자 요건 : ①영농교육이수, ②귀농의사확실 ③영농기반보유, ④농촌으로 주소이전, ⑤55세이하, ⑥지도소장의 영농정착 확인
 - 지원조건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금리 6.5% 2년거치 3년상환
 - ⇒ 6.8 현재 실적 : 자금신청 1,856명, 지원대상자 확정 991명(자금 집행 43억원)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업무 보조인력 채용(26억원)

-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문제성이 있는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자료 전산화(3,248명, 40일간)
- '98.6.8 현재 추진실적 : 채용인원 2,808명, 인건비 집행액 765백만원

□ 1석 3조의 숲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395억원)

- 간벌,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등산로 정비 등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숲의 자원화 촉진, 실업해소에 기여 및 산불방지 도모
- 고용계획 : 7,000명(8개월 160일 기준)

사 업 명	소 요 예 산	상 시 고 용
계	395억원	7,000명
간벌등 나무가꾸기	319	5,000
도시근교 산림정비	76	2,000

- 추진실적(6.8 현재) : 206개 시·군·구 667개 사업장에서 사업실시
 - 간벌등 나무가꾸기 : 3,789명 1,883ha
 - 도시근교 산림정비 : 1,018명, 348ha, 222km
- 그동안의 주요 추진내용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사무실 개소식 참석 격려(장관, 4.29)
 -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 실시
 - 1차 : '98.5.4 ~5.16(2주), 3개 임업기계훈련원(125명)
 - 2차 : '98.5.18~5.30(2주), 3개 임업기계훈련원(138명)
 - 「생명의 숲과 문학의 만남」행사참가 및 격려(장관 5.29)

□ 서울역 앞에 「농촌일자리 합동안내센터」 설치·운영(6.1~6.10)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노숙자를 포함한 실직자들이 농번기 농촌의 일터와 연결되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서울역 광장에 「농촌 인력은행·숲가꾸기·귀농 합동안내센터」를 설치 운영
 - 우유소비 캠페인과 꽃사용 생활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
- 6.8일 현재 상담 현황 : 2,150명 (노숙자 226명)

7. 농정홍보 및 농림조직 활성화

가. 새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 장관 특강을 통한 농정방향 설명 및 협조 당부

- 중앙공무원교육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고려대학교 자연대학원 등 총 9회

□ TV, 일간지, 라디오 및 외신기자와의 대담·간담회 등을 통해 농정방향을 국내외에 홍보

- 장관주재 대담 및 간담회 실적 : 39회

□ 여론주체에 주요 농정자료를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정부의 농정 추진 현황을 알리고 농정에 대한 관심제고

- 농정자료 송부대상 : 농업인·소비자단체대표,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450명
- 송부방법 : 우편이용(월 1회), E-mail 등
- 대통령 업무보고서, 농정관련 대통령 말씀내용 및 후속조치 추진 상황, 국회업무보고 자료, 강의자료 등 3회 19건을 송부

나. 농림조직 운영 활성화 및 행정경비 절감

□ 조직의 민주화·활성화 및 실무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장관과 사무관 및 6~7급 직원과의 대화」를 개최

- 조직운영, 주요정책 현안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총 10회 개최)

□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실무 공무원을 「이달의 농림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시상 및 격려

- '98.5월의 공무원 선발 시상 : 농림부 시장과장 등 3명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외부 전문가(박성자 한국여성농민 연구소 소장)를 공개채용·임명하고 농업인 단체와 학계전문가 2인을 장관 자문관으로 임명하여 조직의 활력화 도모

□ 행정경비 절약 시책 적극 추진

- 재생용지 구매 및 양면복사, 공람문서의 LAN(부내전산망) 활용 등을 적극 추진, 1/4분기 사무용품비 절감목표(10%, 35백만원)를 20% 초과달성(절약실적 : 42백만원)
- 불필요한 전등 소등, 중식시간 소등등 절전 및 에너지절약 운동 실시
 - '98.1/4분기중 전력은 전년동기 대비 0.9%, 난방유류는 21%를 각각 절감
- 국장실 여직원 감축 배치 : 국장 1인당 비서 1명 → 국장 2인당 1인
- 해외출장비 경비절약
 - 비행기 좌석 1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절감된 출장경비 반납 (396만원)
- 명패제작 대금 절약
 - 명패제작시 구체적인 직위대신 직급만을 표시하여 자리이동시마다 제작되는 명패제작비 절약
 - 명패의 재질을 목재에서 아크릴로 바꾸고 크기도 통일하여 제작비 절감 : 국장의 경우 명패당 27,500원 절감(44,000 → 16,500원)
- 소액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대신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여 우리농산물 애용 및 건전소비 유도
 - '98중 상품권 지급계획 : 395건, 86,520천원
 - 업무추진비를 절약, 선인장·버섯스넥 등 우수 농산물을 장관이 직접 구입, 홍보차원에서 각계에 선물
- 『에너지절약의 날』(매월 첫주 금요일)을 지정하여 사무실별 담당자가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Ⅲ. 국민의 정부 100일 농정에 대한 평가

1. 농림부 자체평가

가. 농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의미

□ 농업중시의 새로운 시대 개막

- 공업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그동안 농업·농촌은 공업이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농업은 사양산업이며, 전근대적인 비교 열위의 산업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이 존재
- 「국민의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농업도 어느산업 못지않게 근대화할 수 있으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농정철학에 바탕
- 다만, IMF 외환위기로 나라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농업관련 대통령 말씀 >

- “농업을 중시하고 ……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 (취임사)
- “농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한 기간산업” (농림부 업무보고서)

□ 농업인과 소비자가 농정의 주체로서 농정에 함께 참여

- 정부주도의 정책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농업인)을 위한, 국민(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국민(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추진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

□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 식품의 안전성·품질,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농정 추진

- 증산과 비용절감 등 효율성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식품의 안전성, 국토 환경보전을 병행하는 농정 추구

나. 지난 100일간의 농정평가

(1) '98.1/4분기중 국민경제에의 농림분야 기여도 분석

경제성장 : 경제성장율을 0.2%P 제고

- '98.1/4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Delta 3.8\%$ 의 負의 성장을 기록
 - 농림어업을 제외한 GDP 성장율 : 전년대비 $\Delta 4.0\%$
 - 농림어업 GDP 성장율 : 전년대비 4.4%
 - 부문별 성장율 : 농업 7.3% , 임업 $\Delta 0.7\%$, 어업 0.4%
- 농림어업 부문의 성장이 전체경제의 성장율을 $0.2\%P$ 제고

물가안정 : IMF 체제하에서 국민식량을 값싸게 공급

- '98.5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8.2%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6.2% 상승, 물가안정에 기여
 - 전년말 대비 농축산물 물가상승율은 4.6% 로 소비자전체 물가 상승율(3.8%)보다 높으나 봄무·배추 등 보합해제품목(6개) 제외시 4.2% 로 실질적인 면에서 물가안정에 기여
- 2년 연속 풍년농사로 쌀값이 안정되는 등 민생안정에 크게 이바지

고용증대 : 실업자 흡수를 통한 사회안정에 기여

- '98.4월 농림업 취업자 수는 2,673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천명 (8.8%) 증가
 - 농림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81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있는 현상으로 경기침체에 농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사회안정 기능으로 평가
- '98.1~4월간 귀농가구수는 2,713가구로 파악

(2) WTO/IMF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정방향의 정립

- 지난 정부에서 UR타결이후 농어촌투자를 확대하고 규모화·첨단시설 위주의 농정을 추진하였으나, IMF위기 앞에 취약성 노출
 - 수입사료, 유류 등 해외자본과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결과, 외환위기 발생이후 농업경영의 어려움 심화
 - 첨단시설에 대한 투자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였고, IMF 위기이후 고금리와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 국민의 정부 새내각 출범이후 지난 농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농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정방향을 정립
 -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친환경 농업의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을 4대 중점과제로 설정
 - 대규모 첨단시설을 이용한 기업경영체 중심의 농정에서 우리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에 역점
 - 가족농의 특성에 맞는 규모확대(Economy of Scale) 추진
 - 저장·유통·가공참여 등 사업범위의 확대(Economy of Scope)를 동시에 추구
 - 아울러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품질·안전성·마케팅 등 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제시

- 이러한 농정방향은 IMF체제라는 경제여건에 적합하고, 우리나라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 과거의 “엘리트 위주의 농정”이라는 비판이 사라지고 많은 농업인의 농정 참여의식 확산

(3) 「농·소·정」이 협력하는 「열린농정」 추진체계 구축

- 과거에는 농정추진에 있어서 농업인의 참여가 부족하여 정부와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국민적 합의형성 미흡
 - 농정방향 및 추진체계 등과 관련, 농업인 단체와 상당부분 이견이 존재하여 개방화 시대에 불필요한 힘의낭비 초래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대표는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대표가 농정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농정추진체계를 정립
 - 과거의 『재야단체』는 물론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를 농정개혁작업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실시
 - 농업인단체와 생산자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단체간 협력관계도 강화
- 이와 같이 대통령님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농림분야에 구현한 결과, 정부와 농업인단체간의 갈등과 상호불신이 해소되고 농업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체제가 구축되는 성과를 거양
 - 특히, 주말·공휴일에 농촌현장을 방문하는 『이동장관실』을 17회나 운영하는 등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현장농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다만, 「현장농정」이 1급, 국·과장급 공직자에게까지는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4) 농정개혁작업의 추진

- 과거에도 중장기대책 수립시 농업인단체 등의 참여가 있어 왔으나 내용면에서 미흡
 - 과거 정책의 관행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 대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음
 - 정치적인 필요 등으로 대책수립을 서둘러 발표,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음

- 「국민의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모든 문제와 과제를 원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
 -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농정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 작업 추진
 - 무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원칙과 합리성의 기초 위에서 합의도출에 역점

- 지난 100일간은 농정개혁을 위한 추진체계와 방향정립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개혁과제의 선정과 논점을 정리하고 참여자간의 공감대 형성

- 다만,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농정개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

(5) 농업 투융자제도의 개선

- 지난 정부에서는 42조 및 15조 농특세 등 농촌투자를 확대 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실화사례 발생
 -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보조지원 등으로 과잉수요(공급)를 유발하여 경제적 효율성 저해
 -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규모확대·시설현대화를 대폭 지원하여 부실화 초래
 - 특히, IMF위기 이후 규모화·첨단시설 농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

- 농정개혁위원회의 농업 투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융자 제도를 개선하여, '99 예산안 편성에 반영
 - 농림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농업인 지원사업의 보조비율 축소, 유리온실·축사시설 운영의 내실화, 종합자금제 도입, 지방 정부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예산 확대 등 투자효율 제고방안 마련

- 이와 같은 투융자제도 개선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국민의 정부」 통치철학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율성과 시장경제원리 확대

- 다만,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첨단시설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경영능력 제고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 하는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6)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개혁 추진

-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조직과 기능이 비대하다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가시적 조치 미흡
 - 기관단체의 기능조정이 일부 있어왔으나 부분적·지엽적인데 그치고 농업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기관·단체가 비대하여 농업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투융자 재원이 중간에서 기관·단체에 누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대두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정추진 기관·단체를 농업인에 대한 봉사기능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고 감량·효율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착수
 - 과거의 점진적·부분적 개선이 아닌 조직전체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 방안 수립중
- 다만, 기획예산위원회와의 개혁작업 일정 및 협의 등으로 가시적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

(7) 적극적인 농업경영 안정대책의 추진

-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 부담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총 5,135억원의 경감혜택을 부여, 긴급한 경영위기 상황은 완화
- 특히 5.18 당정협의회시 「농촌살리기 10대 지원시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 그동안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당정이 해결방향에 합의

- 여러 농업인단체에서도 환영성명을 발표
- 앞으로 관련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과제

□ 시설원에·축산농가의 경영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

- 농자재가격·금리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농산물 수요는 감소하여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부담도 더욱 커짐
- 소의 경우 단순한 큰 수소 수매를 실시, 쇠고기 공급량 축소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 마련이 미흡
- 우유의 경우 저능력우 도태가 지연되어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원유가격을 오히려 인상하여 수요감소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발생

□ 앞으로 유리온실, 축사, 영농법인중 일부 부실경영체를 어떻게 내실화 하느냐가 과제

- 자체 평가결과 약 6.3%가 부실경영체로 판명
-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도산우려가 있는 농가는 유형별로 기술·경영지도 및 운전자금 등 지원
 - 신규투자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치중한 자구노력 유도
- 이미 도산된 농가는 원활한 제3자 인수 지원

(8) 민·관 합동의 대외통상협력 추진 및 국익보호

□ 과거에는 정부중심의 대외통상협력 추진으로 부작용 발생

- 협상동향, 상대국의 요구, 우리의 대응방안 등이 농업인·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협상전략과 협상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상대책반」을 구성하여(4.3)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

- 협상의제, 상대국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역량을 결집

□ OECD 농업각료회의, FAO 아·태지역 총회 등에서 식량안보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성과

(9) 농림조직 운영의 활성화

□ 새로운 형태의 인사·조직운영으로 농림조직의 활력제고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고 농업인 단체 및 학계인사를 장관자문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조치는 조직 내·외부간 의견조율과 조직의 활력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장관과 사무관 및 6·7급 직원과의 대화』, 「이달의 농림공무원」 제도 실시 등으로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사기양양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전기·유류절약, 해외출장제도 개선 등으로 행정경비를 절감, IMF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확산

- 장·차관 등 '98. 1/4분기 사무용품비를 당초 절감목표 (10%, 35백만원)보다 20% 초과 달성(절약실적 : 42백만원)
- 해외출장시 비행기 좌석을 1등급 하향조정하는 등 경비를 절감, 남은여비는 자진반납하여 IMF 시대의 절약하는 의식을 함양

2. 농업인·소비자단체 대표, 언론·학계 등의 평가

- 국민의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지난 100일간의 농정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 새정부의 농정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
- 다만, 농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농정개혁 작업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

가. 여론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 : 농정관련 각계대표 125명에 대해 설문지 송부, 이중 74명이 응답
 - 응답자 : 농업인단체대표 19, 소비자·시민단체대표 8, 언론인 4, 교수 및 학계 33, 생산자단체·협회 임직원 10명
- 조사일시 : '98. 6. 5(금), 8(월) (FAX를 통해 이틀 설문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여론조사 결과 요약

< 지난 정부('98.2.25이전) 농정평가 >

- 지난 정부('98.2.25이전)의 농정평가와 관련, 51.3%의 응답자가 『농촌투융자의 확대』를 가장 잘한 시책으로 평가
 - 그러나 실제 투융자 규모가 정부발표보다 적었다는 평가가 75.7%에 달해 42조 투자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인식

□ 42조 구조개선 사업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하였으나(78.4%)

- 대부분의 응답자가 농촌투자가 일부 비효율적(52.7%), 또는 상당부분 비효율적(39.2%)으로 사용되었다고 응답
- 정부의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농업인의 의타심을 조장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다수 (89.2%)

□ 첨단시설 건설과 외형적 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이것이 IMF사태 이후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93.3%가 응답

< 새정부의 지난 100일간 농정평가 >

□ 『국민의 정부』의 농정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기대하고 있음 : 93.2%)

- IMF경제여건 등으로 약속의 일부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90.5%가 응답

□ 『국민의 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농정평가와 관련하여 90.6%의 응답자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 『국민의 정부』의 농정방향 및 중점과제와 관련

- 첨단시설 등 기업적 경영체 중심의 농정에서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로의 정책전환에 대해서는 90.6%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주곡자급 등을 4대 농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100%) 적절한 것으로 평가

□ 농정추진체제와 관련

- 대부분(97.3%)의 응답자가 『농·소·정』 협력체제 구축이 “국민에 의한”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치철학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평가
- 지난 100일의 농정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통치철학에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93.2%를 차지

□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 『농정개혁위원회』 등의 농정개혁작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57%를 차지
- “농정개혁작업이 잘되고 있다”가 33.8%, “잘못 추진되고 있다”가 23%, “잘모르겠다”가 43.2%를 차지

□ 새정부의 부문별 농정에 대한 평가

- 새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농가부담 경감시책에 대해서는 63.2%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
- IMF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①농업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 하향조정 및 기금금리의 '97수준 유지(25.7%) ②추곡수매가 5.5% 인상(18.9%) ③농·축협의 상호금융 상환연기(18.2%) ④농업·축산 경영자금 확대공급(13.5%) 등으로 평가
- 추곡수매가 5.5% 인상에 대해서는 74.3%가 쌀의 자급과 영농의욕 고취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
- 전체 응답자의 95.9%가 김포 간척지는 농지로 보전해야 한다고 평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가 전반적인 유통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75.6%가 응답하였으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 직거래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87.8%가 응답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50.0%의 응답자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50.0%는 부진하다고 응답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기능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 대폭적인 기구·인력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40.5%), 약간의 기구·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47.3%)이 주류를 이루었음.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대해서는 81.1%가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고 응답
- 2.7%의 응답자만이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에 있는 것이 좋다고 평가

< 향후과제 >

-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중 시급하거나 중요한 것으로는
- ①쌀 자급기반의 확충(16.2%), ②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14.6%), ③농업기술 개발 및 정보화(11.9%), ④농정추진 기관·단체의 개혁(10.0%), ⑤친환경농업의 육성(9.2%) 순으로 응답

IV. 향후과제(주요 검토·추진사항)

1. 주곡자급기반의 확충

- 우량농지보전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용자수매제등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기능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엘니뇨 영향으로 우려되는 병해충 및 만일의 냉해 등에 대비한 영농대책 추진

2. 친환경농업의 육성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등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 환경농산물 표시제 등 관련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방안의 구체화
-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등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확대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화학비료를 덜 쓰고 지력을 증진하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자운영 재배 등) 추진

3. 농산물 유통구조개혁 ('98.6까지 개혁방안 마련)

- 직거래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제도화)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법률안에 직거래 지도·감독 규정, 공산품을 취급대상 품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 신규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등 도매시장 구조조정 방안
- 규격농산물 출하체계 정립 등 산지유통 혁신

4. 농업경영 안정대책의 추진

- 당·정 합의사항인 「농촌살리기 10대 지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소·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 첨단시설농가의 기술·경영의 혁신 등 농업경영의 내실화
-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농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농가 유형별 부채 경감대책의 강구

5. 협동조합 개혁('98.7까지 개혁방안 마련)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
- 지역조합간, 전문조합간, 이종조합간(농·축·임협) 합병문제
- 임원 선출제도, 부실조합 정리방안 등 경영관리체제의 개선

6.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개혁

- 기관·단체별 조직 및 인력의 축소 조정
- 부실 자회사 등의 과감한 정비
- 유사기능·조직의 통폐합·정비 문제
- 조직의 민주화와 운영의 효율화 문제

7. 중장기 「농촌발전대책」 수립과 투융자제도 개선('98.8 확정)

- 주요 분야별 개혁과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시책의 구체화
- 중장기 투융자 계획의 수립

여 백

참 고 자 료

1. 「국민의 정부」 농정평가 설문조사 결과 65
2. 주요 농정기사 모음 81
3. 농민단체 등의 주요 성명서 97
4. 「국민의 정부」 100일 주요 농정일지 131

여 백

「국민의 정부」 농정평가 설문조사 결과

여 백

『국민의 정부』 농정평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목적

국민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 동안의 농정추진 상황에 대하여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농정 추진에 이를 반영키 위해 조사

2. 조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조사기간 : 1998년 6월 5일(金), 8일(月)

4. 조사대상 및 응답현황

구 분	농업인·농업 인단체임직원	소비자·시민 단체임직원	언론인	교수 및 학계인사	생산자단체 협회임직원	계
발송대상(A)	27명	14	5	66	13	125
(비율%)	22	11	4	53	10	100
응답자(B)	19	8	4	33	10	74
(비율%)	25	11	5	45	14	100
B/A비율(%)	70	57	80	50	77	59

5. 조사방법 : FAX 설문조사

6. 주요조사내용

- 지난 정부(98.2.25 이전)의 농정평가
- 국민의 정부 농정추진상황 평가
- 앞으로('98.6.5이후)의 농정과제

▣ 농정추진상황 평가 설문조사 결과

< 지난 정부('98.2.25 이전)의 농정평가 >

1.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한 농정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42조 조기투융자 및 15조 농특세 신설등 농촌투융자의 확대	38	51.3
②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	15	20.3
③ 농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 농업인 연금제등 농촌복지여건 개선	11	14.9
④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한 예산편성등 상향식 농 정제도의 도입	10	13.5
계	74	100.0

2. 지난 정부에서는 42조원 투자계획을 3년 앞당기고 15조원 농특세를 신설하는 등 농촌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42조 및 15조원 투자로 농촌투자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18	24.3
② 농촌투자가 크게 늘기는 했지만 융자금, 지방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 발표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다.	46	62.2
③ 융자금, 지방비, 자부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이전에 비 해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	6	8.1
④ 42조와 15조는 허구이며 농촌투자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준이었다.	4	5.4
계	74	100.0

3. 지난정부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크게 기여하였다.	11	14.9
② 다소 기여하였다.	47	63.5
③ 기여하지 못하였다.	13	17.6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3	4.0
계	74	100.0

4. (문2)와 관련, 42조 및 15조 농특세 투자가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졌다.	2	2.7
② 상당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부적격한 사람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등 비효율적으로 쓰여졌다.	39	52.7
③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졌다.	29	39.2
④ 대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졌다.	4	5.4
계	74	100.0

5. 지난 정부에서는 개별농가의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보조지원을하여 농업인의 의타심을 조장하고 책임경영의식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25	33.8
② 다소 그렇다.	41	55.4
③ 그렇지 않다.	8	10.8
④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계	74	100.0

6. 지난 정부에서 유리온실등 첨단시설의 건설과 외형적인 규모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이것이 IMF사태 발생이후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44	59.5
② 다소 그렇다.	29	33.8
③ 그렇지 않다.	1	1.3
④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계	74	100.0

< 「국민의 정부」의 농정추진상황 평가 >

7.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앞으로 농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새정부의 농정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33	44.6
② 다소 기대를 하고 있다.	36	48.6
③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5	6.8
④ 전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0	0.0
계	74	100.0

8. 대통령께서는 농가부채 경감, 주곡자급,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등 농업발전을 위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대부분 지켜질 것이다.	7	9.5
② 농업·농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은 인정하나 IMF 여건 등으로 일부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61	82.4
③ 대부분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6	8.1
④ 전혀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0	0.0
계	74	100.0

9.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건전한 가족농의 육성, IMF 체제하의 농가 경영안정대책, 투융자 집행방식의 전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참여 확대 등 농정방향과 집행방식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농정방향과 지난 3개월간의 농정 시책 추진에 대해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잘하고 있다.	9	12.2
② 잘하고 있다.	58	78.4
③ 잘못하고 있다.	7	9.4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0	0.0
계	74	100.0

10. 과거에는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적 경영체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정부에서는 건전한 가족농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규모화·전문화·협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WTO로 상징되는 개방화와 IMF 사태 등 현실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적절하다.	21	28.4
② 적절하다.	46	62.2
③ 부적절하다.	6	8.1
④ 매우 부적절하다.	1	1.3
계	74	100.0

11. 농림부가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 농정과제인 ① 주곡자급기반의 확충 ② 농산물 유통개혁 ③ 친환경 농업의 육성 ④ 농산물 수출확대는 현재의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선정된 정책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적절하다.	26	35.1
② 적절하다.	48	64.9
③ 부적절하다.	0	0.0
④ 매우 부적절하다.	0	0.0
계	74	100.0

12. 정부는 『농·소·정』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 즉 『열린농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농정추진방식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에 의한”,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과 함께 정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적절하다.	32	43.2
② 적절하다.	40	54.1
③ 부적절하다.	2	2.7
④ 매우 부적절하다.	0	0.0
계	74	100.0

13. 새정부의 농정방향과 지난 3개월간 농정추진 방식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통치철학에 입각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적절하다.	16	21.6
② 적절하다.	53	71.6
③ 부적절하다.	5	6.8
④ 매우 부적절하다.	0	0.0
계	74	100.0

14. 정부는 『농정개혁위원회』,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농정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대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개혁안을 확정지을 계획인지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6	8.1
② 잘 알고 있다.	26	35.1
③ 잘 모르고 있다.	38	51.4
④ 전혀 모르고 있다.	4	5.4
계	74	100.0

15. 정부는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8월말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추진 상황을 볼 때 농정개혁 작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1	1.4
② 잘 추진되고 있다	24	32.4
③ 잘못 추진되고 있다.	16	21.6
④ 매우 잘 못 추진되고 있다	1	1.4
⑤ 잘 모르겠다.	32	43.2
계	74	100.0

16. 정부에서는 그동안 IMF 사태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추곡수매가 5.5%인상,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상 수준의 하향조정(8.5 → 6.5%), 각종 기금의 정책자금 금리의 '97년 수준 유지, 축산·시설원에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농업·축산경영자금의 공급확대('97대비 6,500억원 증), 유류구입자금 등 긴급운전자금 지원(4,308억원) 등의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11	14.9
② 다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35	47.3
③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27	36.5
④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1	1.4
계	74	100.0

17.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다음의 정부시책중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사항 2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추곡수매가 5.5%인상	28	18.9
②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상수준 하향조정 및 농림부 소관 기금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의 '97년 수준 유지	38	25.7
③ 축산·시설원에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연기(5,752억원)	18	12.2
④ 농업·축산 경영자금의 확대공급('97대비 6,500억원 중) - 농·축산경영자금 : ('97) 3조 8,200억원 → ('98) 4조 4,700억원	20	13.5
⑤ 농·축협의 상호금융의 상환연기 및 연체이자 등 징수유예 (약 7조 5천억원) - 이자납부시 원금상환유예(6~12개월) 또는 대환조치 실시	27	18.2
⑥ 유류구입자금 등 긴급 운전자금 지원(4,308억원)	9	6.1
⑦ GSM-102등 원료곡물 수입을 위한 외화자금 확보	4	2.7
⑧ 원료곡물 수입을 위한 L/C 개설 지원	4	2.7
계	148	100.0

18. 정부는 지난 3년간 동결해온 추곡수매가를 금년에 5.5% 올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상이 주곡인 쌀의 자금과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크게 기여할 것이다.	11	14.9
② 다소 기여할 것이다.	44	59.4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9	25.7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0	0.0
계	74	100.0

19. 최근 김포간척지의 비농업용 토지로의 전용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농림부는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김포간척지를 본래의 매립 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농림부의 농지보전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적절하다.	42	56.8
② 적절하다.	29	39.1
③ 부적절하다.	3	4.1
④ 매우 부적절하다.	0	0.0
계	74	100.0

20. 정부는 농산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거래는 도매시장·소매상의 유통마진 축소 등 기존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아울러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농산물 유통개혁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크게 기여할 것이다.	22	29.7
② 다소 기여할 것이다.	34	45.9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7	23.0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	1.4
계	74	100.0

21. 정부는 농산물의 직거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크게 기여할 것이다.	31	41.9
② 다소 기여할 것이다.	34	45.9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9	12.2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0	0.0
계	74	100.0

22. 정부는 소비자 기호 변화에 부응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키로하고, 병해충 종합관리(IPM) 및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제도의 도입, 흙살리기 지원, 농업용 수질개선 대책 추진, 환경농산물 수매 지원 및 판매망 설치지원,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추진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잘 추진되고 있다.	8	10.8
②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다.	29	39.2
③ 부진한 편이다.	34	45.9
④ 매우 부진하다.	3	4.1
계	74	100.0

23. 정부는 1992년 체육부로 이관되었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농림부 환원되면 부도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반드시 농림부로 환원되어야 한다.	60	81.1
② 환원되면 좋지만 안돼도 무방하다.	10	13.5
③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2.7
④ 잘 모르겠다.	2	2.7
계	74	100.0

24. 정부는 농정추진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기능 재조정과 조직의 효율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농업관련 기관의 조직·인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구 분	응답(명)	비율(%)
① 매우 비대하므로 대폭적인 기구와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30	40.5
② 다소 비대하므로 약간의 기구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	35	47.3
③ 기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므로 기구와 인력을 늘려야 한다.	8	10.8
④ 기구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1	1.4
계	74	100.0

< 앞으로(6.3이후)의 농정과제 >

25.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중 가장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 5개를 골라서 표시해 주십시오 () () () () ()

구 분	응답자(명)	비율(%)
①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	60	16.2
②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54	14.6
③ 친환경농업의 육성	34	9.2
④ 농산물 수출확대	21	5.7
⑤ 농업기술 개발 및 정보화	44	11.9
⑥ 농촌투자의 확대	30	8.1
⑦ 농가부채 경감대책	21	5.7
⑧ 농정추진기관·단체의 개혁	37	10.0
⑨ 주택·도로·상하수도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13	3.5
⑩ 교육·의료·연금등 농업인 복지증진시책	27	7.3
⑪ 통일에 대비한 농정추진	29	7.8
계	370	100.0

26. (문25)와 관련 위에서 제시한 과제이외에 앞으로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생각나는대로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장농정, 지역자치농정 등 열린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가능한 농정, 책임농정, 일관성 있는 농정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농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함
-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건전한 가족농을 적극 육성하며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관련 인력육성제도의 체계화·시스템화가 필요
-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농업인자녀의 교육문제 해결, 농촌주택·도로 등 SOC분야와 농업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함
- 협동조합등 농정추진기관 정비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량자급을 향상,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친환경농업 기술체계의 정비·보급 등 주요 농정의 추진
- 기타 기업·학교·농민 등의 기술협력체제 구축, 축산분야 구조조정의 필요성, 농업관련 조세 경감조치 강화, 농학계 대학 지원 증대, 통일대비 농정추진 등

[별첨]

설문조사 대상자

□ 농업인·농업인단체(27명)

단체명	성명	단체명	성명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강완목	한국유기농협회	정진영
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황창주, 황장수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박재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강춘성, 김인식	흙살림연구소	이태근
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	정장섭, 이학규	순천축협조합장	황금영
농촌지도자중앙회	김순동, 박병규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고송자, 윤금순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한국여성농업인증양연합회	편정옥, 박강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봉락
생활개선중앙회	이하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건우
유기농업협회	유달영	한국카톨릭농민회	정재돈
정농회	정상목	한국포도회	김성순

□ 소비자·시민단체(14명)

단체명	성명	단체명	성명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유종성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례
소비자문제시민모임	송보경, 김재욱	대한YWCA연합회	김숙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김영주	대한영양사협회	노숙령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생활협동조합중앙회	홍동선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	여성민우회	이경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영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김승오

□ 언론인(5명)

단체명	성명	단체명	성명
농민신문	이상홍	한국농어민신문	황민영
농수축산신문	강신수	축산신문	윤봉준
		한국영농신문	이의석

□ 교수 및 학계인사(66명)

단체명	성명	단체명	성명
건국대학교	김영철, 김정주, 정찬길	한국농공학회	최예환
경북대학교	이호철, 최규섭, 김길웅	한국농업경제학회	오호성
단국대학교	장원석	한국농업교육학회	이용환
방송대	권광식	한국농업기계학회	이용국
상지대학교	서중일	한국농촌계획학회	정하우
서울대학교	이돈구, 김완배, 김호탁	한국농촌사회학회	한상복
전남대학교	전태갑	한국농촌생활과학회	박양자
전북대학교	최라환	한국농촌지도학회	김성수
중앙대학교	윤석원	한국농화학회	류순호
천안외국어전문대	왕성우	한국마이크플라스마학회	주갑순
충북대학교	권원달, 성진근, 이순혁	한국생물생산시설환경학회	정두호
강릉대학교	김학기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강인구
강원대학교	박규택, 황병화, 강창길	한국수정란이식학회	박충생
경상대학교	박창석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준탁
공주대학교	최병익	한국식물조직배양학회	최광태
목포대학교	박형빈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영순
밀양산업대	이호응	한국약용작물학회	박상일
상주산업대	윤재수	한국연초학회	김용태
순천대학교	김학진	한국영양사료협회	백인기
안동대학교	이시무	한국원예학회	이병일
안성산업대	허강철	한국육종학회	하응용
진주산업대	고영옥	한국용용곤충학회	부경생
충남대학교	이규승	한국작물학회	홍병희
대한수의학회	한홍틀	한국잔디학회	장남기
한국가금학회	김선중	한국잡초학회	권용용
한국가축번식학회	김창근	한국축산학회	정길생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김영상	한국토양비료학회	류순호
한국낙농학회	김중우	한국환경농학회	김복진

□ 생산자단체 · 협회(13)

단체명	성명	단체명	성명
농협중앙회	서정근, 이내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정용
축협중앙회	박수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황창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조기환	대구중앙청과	이용우
농촌경제연구원	유철호	산지유통인연합회	장해식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동희	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김홍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나경만	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이규정

여 백

주요 농정기사 모음

여 백

주요 농정기사 모음

- 농·소·정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 85
- 농림부장관 기자간담회 86
- 추곡수매가 5.5% 인상 발표 87
- 농림부장관 중앙일간지 대담 88
-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불가방침 통보 89
- 농림부 업무보고(대통령) 90
- 농림부 과천청사앞 광장에 매주 금·토요일 직거래장터 운영 91
- 농림부장관 FAO 아태총회 기조연설 92
-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 발표 93
- 서울역 광장 농촌인력은행, 숲가꾸기, 귀농 합동안내센터 개설 94
- 농림부 예산절약 행정(자린고비행정) 95

여 백



농림부장관·관련단체장 간담회 金成勳(김성훈)신임 농림부장관(왼쪽끝)은 4일 과천 농림부 청사 회의실에서 농업관련 단체장 초청간담회를 갖고 농민 소비자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金成勳(김성훈)신임 장관의 개혁성향을 파악해서인지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金장관은 이날 오전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농정, 열린농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金장관은 이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협력하는 「農(농)·消(소)·政(정)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金장관은 「유통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

김성훈 농림부장관 기자간담회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4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협동조합법은 소비자생활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소비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협동조합법은 소비자생활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소비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局-課長 모두 현장 나가라”

金成勳농림 취임一覽



◇김성훈장관

시골 할아버지 같은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틈

만 나면 농촌을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물어본 덕에 학자 시절부터 나의 제일 큰 스승은 농민』이라고 전제, 『농림부 국-과장들도 전부 현장에 나가라』고 주문했다.

과거의 농업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세계에서 곡식을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 소』라면서 『소에게 볏짚이나 초사료 같은 국내 부존자원을 먹이지 않고 수입 배합사료만 먹이다 보니, 이번 IMF 위기로 낙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姜京希기자>

南北 곡물 계약재배 추진

金成勳농림 회견

(權赫燦기자) 정부는 남북한간 농업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에서 농축산물을 생산, 국내로 반입하는 '남북한간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감자, 참깨, 팥, 녹두 등 곡물생산에서 시작해 소, 돼지 등 축산물 분야까지 협력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임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통일에 대비, 남북한 농업의 상호 보완성을 최대한 살리고 남북한간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와 우리의 농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의 일환으로 우리로서는 포기단계에 있는 팥이나 녹두, 참깨 등의 생산을 북한에서 하고 생산물을 남한이 사들이는 계약재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곡가 5.5%인상 총수매 7백70만섬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환)는 21일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추곡 수매가 결정 회의에서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추곡 수매가 결정 회의에서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환)는 21일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중 앙 일 보
3月23日 2面

추곡수매價 5.5% 인상

농림해양수산위 결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환)는 21일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전년도(13만 7천 9백 90원)보다 5.5% 인상한 14만 5천 5백 80원

(80kg기준)으로 하고, 수매량은 전년도(8백10만섬)보다 줄어든 7백70만섬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하곡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도 쌀보리의 경우 40kg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5% 인상한 3만 1천 4백 30원으로 하고, 겉보리 역시 5.5% 인상한 2만 7천 7백 3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손병수 기자

京 鄉 新 聞
3月23日 2面

올 추곡가 5.5% 인상

농림해양수산위, 수매량은 770만석 확정

올해 추곡 수매가가 지난해보다 5.5% 인상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환)는 지난 21일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도보다 5.5%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곡 수매가는 97년도의 13만 7천 9백 90원(80kg

기준)에서 14만 5천 5백 80원으로, 수매량은 전년도(8백10만석)보다 줄어든 7백70만석으로 확정됐다.

또 하곡 수매가도 5.5% 인상돼 쌀보리의 경우 40kg이 3만 1천 4백 30원으로, 겉보리는 2만 7천 7백 30원으로 책정됐다.

권영수기자

東 亞 日 報
3月23日 / 面

추곡 5.5%인상 확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추곡수매가를 전년도보다 5.5% 인상한 14만 5천 5백 80원(80kg 기준)으로, 수매량은 전년도보다 40만섬이 줄어든 7백70만섬으로 결정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또 하곡 수매가와 수매량도 쌀보리의 경우 40kg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5% 인상한 3만 1천 4백 30원으로, 겉보리도 5.5% 인상한 2만 7천 7백 30원으로 책정했다.

(공중식기자)

문화일보
초대석

金成勳
농림부장관

인터뷰 = 郭永吉경제부장

金成勳(김성훈) 농림부장관과의 인터뷰는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대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통개역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에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장관은 이날 세미나의 여운이 남았는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농산물을 더 싸게 사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한다"며 "농림부장관은 물론 소비자장관도 겸한다는 각오로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재야에서 농업문제들 다루다가 이제 농정을 직접 생기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20여일간 농정을 진두지휘하면서 느낀 소감은.

"부임 첫날인 3월4일 농림부 간부들을 만나는 일 늘 재쳐놓고 맨먼저농민단체 대표와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축산농가와 원예농가들을 돌리는데 현장중심의 농



金成勳(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치되 농민들이 그릇된 요구를 해올 때 현정으로 가 설득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金錫哲기자>

"소비자장관 각오 유통구조 수술"

현장 農政으로 농민아픔 해소 농산물 '수출탑' 제정 할로개혁 '절약형 영농기법' 적극도입

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농촌현장을 돌아보면서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작정입니다. 관료주의적 정책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농민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인한 어려움도 채 극복하기 전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엄청난 파고까지 만났습니다. 농지재는 물론 배합사료, 농약비등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에 따라 추가 이자부담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여기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소비자제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농축산물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도록 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농정방향은.

"농민들도 이제 어엿한 경영주체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농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개혁과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주기 위해 국내 부존자원과 토착기술을 활용한 '절약형 영농기법'도 적극 보급할 예정입니다."

- 농축산물 유통문제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기본적으로 유통은 물처럼 흘러야 되고 농민·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업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대대적으로 넓힐 겁니다. 그래

야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 받고 받고 소비자는 값싸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지요. 지난 3월19일 구성된 '농산물유통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 지금과 같은 고환율시대에는 오히려 농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호황(호기)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출증대 복안은 있는지요.

"'농산물무역확대회의'를 정례화하고 품목별 무역진흥대책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형사와 별도로 '수출탑'을 제정, 시상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엔 미화 22억달러여치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50억달러여치를 수출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 북한식량문제 전문가로서 남북한 농업교류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남한은 논농사기, 북한은 밭농사기 중심입니다. 상호보완관계에 있죠. 현재 타산업에서 북한과의 임가공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업분야에서도 계약재배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쌀, 녹두, 참깨 등과 같은 작물을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가 이상적이죠. 또 인도주의 차원의 단기적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남한에서는 비료, 농약, 농업기술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은 병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을 남한에 공급할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 됩니다. 재정경제부, 통일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민기중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이 강조하는 현장중심의 농정은 그가 학자 시절부터 존경해온 茶山(다산) 丁若鏞(정약용) 선생의 實事求是(실사구시) 정신의 영향때문이다.

장관은 趙守(조수) 한나라당총재등 일부 학자들과 다산회를 조직, 활동하고 있다. 일각전까지 듣는 대로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회당을 찾아만큼 다산시상에 매료돼 있다.

<정리=차鶴用기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不可 최후통첩

농림부, 농지원칙 고수 '대리경작' 추진 동아건설 '외자유치' 내세워 강행 움직임

동아건설 소유의 김포매립지 용도를 농지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재차 제동을 걸었다.

농림부는 9일 동아건설등이 김포매립지를 계속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 할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동아건설을 배제하고 제3자가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외자유치가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인 만큼 김포매립지를 외국인투자유치 지역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용도변경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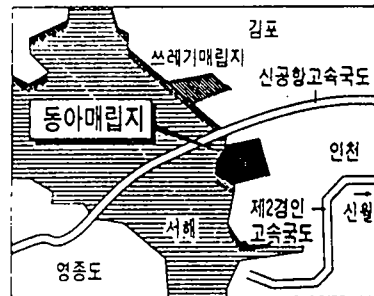
특히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이전에 인천시민들의 민심등을 감안,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농림부 입장=金秉泰(김동태) 농림부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김포매립지는 농지조성을 조건으로 매립을 허가해준 만큼 이제와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동아건설이 매립지를 농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조치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金泳甲(김영갑) 농촌개발국장은 "객관적으로 동아건설측이 김포매립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동아측에 용도변경을 허가해주면 다른 시·군관할의 크고 작은 간척지 사업주들마저 무더기로 용도변경을 요구해와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등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용도변경 때에는 주변 개발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공시지가가 지금의 10배가 넘는 10조원에 이르는등 특혜시비문제도 큰 부담이라는 게 농림부측의 입장이다.

◆동아건설등 움직임=인천매립지의 용도변경문제가 최근 새삼스럽게 고개를 든 것은 IMF이후 외자유치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부터다. 동아건설은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지난 2월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유명가수 마이클 잭슨등이 김포매립지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용도변경' 여론을 은근히 부추겼다.

여기에다 인천시등이 3월21일 외자를 유치, 김포매립지를 개발하자고 정부에 건의한데다 5일에는 현재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한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에 1천4백억원의 2차 협조융자를 해주면서 용도변경을 건의, 이 문제가 더욱 쟁점화됐다.

이와 관련, 동아건설은 용도변경이 허가될 경우 김포매립지를 주거·업무, 종합관광위락, 복합물류등 3개 단지로 나눠 2013년까지 개발하

는 방안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외자유치를 위해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외국에 팔려고 하는 판에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로서는 최적인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활용하려는 것은 한가한 발상"이라며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기부양등을 위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결책=전문가들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문제의 핵심은 '원칙론'과 '실익론' 중 어느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거듭된 논쟁을 통해 매립지를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선 동아건설이 가지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동아측에 상당기간의 매립지 사용권을 보장하는등 각종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정책당국이 이른시일내에 정치적 논리에 의한 판단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낭비적인 논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朴鶴用기자>

우량農地 전용 최대한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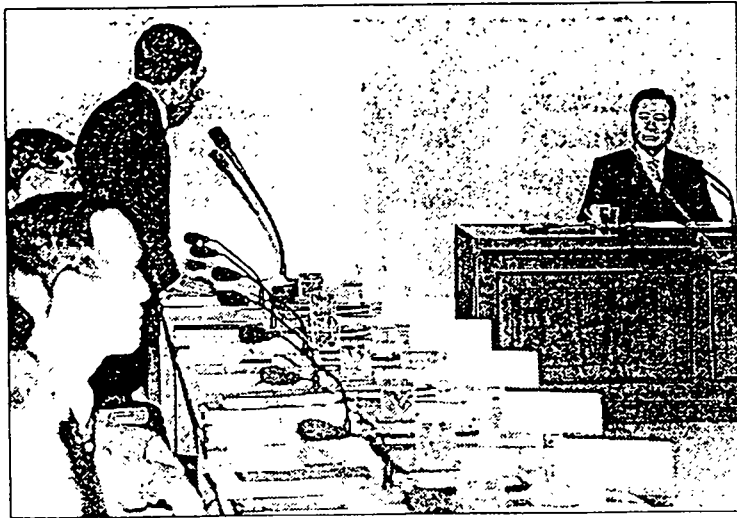
金농림 청와대 업무보고
도매시장 청과 상장료 인하

쌀 자급기반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이 최대한 억제되고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수수료가 1%포인트 이상 인하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6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쌀 자급기반인 논면적은 연평균 3만4,000ha씩 감소되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10만ha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김장관은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주택 등 비농업용 토지로는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수수료(현행 5~7%)를 올해에 1%포인트 이상 인하해 농민들이 연간 170억원이상의 이득을 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농·수·축 협이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 등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생산자 단체들이 직거래활성화 등 경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당부했다. /김경철기자



김대중대통령이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신상순기자

농지轉用 최대한 억제

농림부 업무보고 환경보전 農家 지원

쌀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농지 전용(轉用)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를 위해 농사지으려고 농지를 산 뒤 땅을 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유기(有機)농업 등 환경보전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가 도입된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6일 오전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주요업무보고를 했다.

<관계기사 22면>

김장관은 "논 면적이 연평균 3만4천ha씩 감소하고 있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백10만ha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정부주도 농산물직거래장터 연다

농림부 과천시청사앞 광장서 매주 금요일 운영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매주 열린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17일부터 농림부주도로 농협과 수협 축협

연합이 매주 금요일 과천시청사앞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축협의 금융점포안에

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요지에 대규모 직거래물류센터와 직거래점포도 확충. 오는 2001년에는 농산물 총 유통량의 10~15%를 직거래로 취급하겠다고 김장관은 밝혔다.

과천시청사앞 직거래장터는 반경 1백km 이내 경기도 일원의 농산물생산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판매대를 지정받아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생산자는 도매시장을 거칠 때보다 10~20% 비싸게 팔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싱싱한 농산물을 20~30% 낮은 값에 살 수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수·축·임·직거래 사업은 2월 17일에 시작해 4월 6일까지 정기주말장터 차광산회관내 금융점포내직관 등의 형태로 4천6백52회 열렸다. 이기간중 총매출액은 1천2백33억원. 하루매출도 시작초기에 24억7천1백만원에서 4월 첫째주에 29억7천만원으로 늘었다. 김정아 기자

한 국 일 보

4月10日 8面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우리 농수산물 공동직거래 장터에서 김성훈농림부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식량 비상공급체계 만들자”

金농림, FAO아태총회 연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23일 미안마 양곤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의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알맞은 정책과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주곡의 자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21세기에는 수입국들이 더 많은 곡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지만 세계곡물시장은 판매자 중심으로 굳어져 식량부족국가들에 식량안보의 위협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식량 순수입국들이 유사시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金장관은 『소수 식량수출국 중심구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오는 2000년부터 개최되는 차기 국제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되도록 FAO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성주 기자)



김성훈농림부장관이 23일 미안마 양곤호텔에서 열린 제24차 FAO 아태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훈 농림, FAO 아태총회 기조연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3일 오후 미안마 양곤에서 열리고 있는 제 24차 FAO (세계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총회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장관은 “식량부족국가들의 식량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량 순수입국들이 유사시 식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식량수입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정아 기자

金成勳 농림부장관 23일 미안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미안마=AP)



마사회 연내 농림부 환원

축산농가 지원위해...정책자금 상환 석달 연장

정부 여당은 18일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돼 있는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 사태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지원된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3개월 일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원길 국민의회의, 이태섭 자민련 정책위의장과 김성훈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당정협의를 열고, 사료값 상승 등으로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지원된 5707억원의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민대표와 생산자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가부채조사협의회'를 설치해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상환유예, 이자 경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승근 기자

마사회 농림부 이관

黨政 연내 정부조직법 고쳐

정부와 여당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올해 안에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매립지는 당초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대표·생산자단체 및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농가부채조사협의회를 설치해 유형별로 농가부채 탕감 및 부채상환유예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농가부채 경감조치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부채경감 차원에서 올 7월말 만기 도래하는 5천7백7억원 규모의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김원길(金元吉)국

민회의 정책위의장·이태섭(李台燮)자민련 정책위의장·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金의장은 "정부조직법 등을 고쳐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단이 동아건설 지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김포매립지역 용도변경 요구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불허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 leesr@joongang.co.kr >

50쪽이나 돼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천7백여원의 상환유예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金昌均기자·ck-kim@chosun.com >

정부와 여당은 18일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양 당과 농민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마사회의 연 1천2백여~1천5백여원의 수익금 중 축산정책자금 납입비율을 현재 40%보다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마사회 소관부처
농림부 환원키로
黨政합의

귀농·숲가꾸기·농업기구 근무 등

농림분야 취업안내소 운영

농림부 농협등 합동
전문상담요원 배치
서울역서 10일까지

실직자의 왕래가 잦은 서울역 광장에 농림 분야의 일감 알선과 귀농·재취업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합동안내센터가 설치됐다.

농림부는 서울역 광장에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농촌인력은행·숲가꾸기·귀농 합동안내센터'를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운영한다.

이 안내센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분야별로 전문 상담요원이 배치돼 노숙자,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 안내와 귀농 상담을 겸하게 된다.

또한 농림부는 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국외무대에 진출해 재취업의 기회를 잡고 동시에 국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 모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

농림부는 국제 농업 관련 기구에 진출할 희망자를 찾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매년 200여 명의 공석공고를 내고 있지만 그 동안 낮은 환율과 정보 부재로 한국인의 지원이 전무했다.

농업기구는 일반 행정에서 재무관리 농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직급도 하위직에서 고위직까지 골고루 뽑



농림 분야의 일감 알선과 귀농·재취업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합동안내센터'가 서울역에 설치돼 10일까지 열흘간 활동한다. <박상선 기자>

는다.

연령 또한 30~60세 정도까지 다양한 층이 지원할 수 있다. 급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사회경력이 있으면 연 5만6000달러(7800만원)선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지원하려면 농림부 국제협력과(천리안ID MAFINT)로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원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를 찾아가면 된다. (02)503-7291

■농촌인력은행

전국 383개 단위 농협에 설치된 농촌인력센터가 직영하는 '농촌파트타임' 창구로 도시 실업자와 일손을 찾는 농가를 직접 연결해준다.

일당은 평균 3만원 선으로 일자를 원하는 실직자들은 서울역 안내센터를 찾거나 농협 농촌인력은행으로 연락하면 된다. (02)397

-5605

■숲가꾸기

안내센터를 방문하면 7월 초 모집 예정인 제2기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206개 시군 667개 사업장의 추가 일손모집 정보를 안내할 예정으로 이때 즉시 취업할 수도 있다.

숲가꾸기사업은 하루 3만3000원, 도시근교산림정비는 2만5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02)961-3232

■귀농

귀농 전문가의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는 4월부터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리 6.5%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농창업자금을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 들어 4188명이 귀농교육을 이수했고 이 중 864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정됐다. (02)503-7216

국장2인당 비서1인... 명패는 값싼 아크릴

농림부 예산절약 '자리고비 행정'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국민들은 물론 기업등에서 절약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농림부의 '자리고비 행정'이 화제다.

농림부가 펼치고 있는 '초(초)절약' 행정중 대표적인 사례는 직위 표시가 없는 국장등 간부급의 명패 사용. 농림부는 인사때마다 다시 제작해야 하는 명패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명패에 직위를 표시하지 않고 이름만 명시, 자리가동이 있더라도 그 명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패의 재질도 개당 4만원이 넘는 고급목재에서 개당 1만6천원인 아크릴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직원들이 업무상 해외출장할 때 비행좌석을 1등급씩 하향 조정하고 식비, 숙박비등을 아껴 귀국후 절약된 출장경비를 반납



하고 있다. 金成勳(김성훈)농림부장관은 지난4월 미얀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 아(아)·태(태)지역 총회에 다녀오면서 비행기좌석 등급을 낮추고 식비와 숙박비등을 줄여 2백44만7천원의 출장비를 반납한 바 있다.

이밖에 국장급의 여비서도 국장 1인당 1명에서 2인당 1명으로 줄였다. <朴鶴用기자>

농림부 절약행정 눈에 띄네

너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IMF 시대. 농림부가 '자리고비 행정'을 주창하고 나섰다. 해외출장 때 비행기 좌석 등급을 낮추고 여비서 인원을 줄이는 등 긴축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金成勳 장관이 먼저 총대를 댔다. 지난 4월 미얀마에서 열린 제24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를 다녀오면서 1등석 대신 한단계 낮은 프레스티지 좌석을 이용했다. 여러 행정부처의 차관보급만 해도 1등석을 이용해 온 관례에 비취보면 파격이다. 金장관은 현지에서도 방울 따로 쓰지않고 수행비서와 '2인 1실'을 사용했다. 수행비

서는 같은 방에 투숙한 탓에 장관을 모시느라 애를 먹었다 그 결과 당초 책정액보다 244만7,000천원의

金成勳장관 외국방문때 1등석 사양 호텔도 수행원과 한방...244만원 반납 여비서 절반줄여 국장 2명당 1명 배치

출장비를 절약. 반납했다. 직원들도 2건의 해외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51만7,000원을 절약했다.

10개 국장실마다 근무하던 여비서도 반으로 줄였다. 여비서 한명이 국장 두명의 비서업무를 맡도록 한 것 경조사비도 직급별로 정한 상한

선을 지키도록 권하고 있다. 장관은 5만원, 1급과 국장급은 3만원. 과장급과 일반 직원은 각각 2만, 1만원이다.

이와 함께 업무기능이 비슷한 산하 기관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한곳에서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돌려쓰도록 했다. 2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만4,000원짜리 고급 목재를 사용해온 간부들의 명패도 1만6,500원하는 아크릴로 바꾸기로 했다. '○○○국 국장 홍길동' 식으로 명패에 구체적인 직위 등을 표기하는 대신 '국장 홍길동'으로만 적도록 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드는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농림부 孫貞秀공보관은 'IMF시대'에 행정경비를 절약하는데 농림부가 모범을 보일 것'이라면서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절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朴恩鎬기자 unopark@seoul.co.kr>

여 백

농민단체 등의 주요 성명서

여 백

노민단체 등의 주요 성명서

- 농림부 산하 “여성정책담당관”의 공개채용을 요구한다.(한여농, 3.16)
- 농림부 자문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농, 한농연, 3.17)
- 당면 긴급 농정현안에 대해 국회·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건의(전농, 한농연, 3.18)
- 추곡수매가 5.5% 인상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한농연, 3.21)
-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현행대로 5%로 유지되어야 한다.(한농연, 3.26)
- 국회의 농업정책금리 6.5% 결정에 분노하며(전농, 3.26)
-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여성농업인단체 입장(한여농등 5단체, 4.2)
-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전농, 4.8)
- 동아건설의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카톨릭농민회, 4.9)
-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반대한다.(한농연, 4.25)
- 쌀자급기반이 무너지면, 국민경제가 무너진다. 동아그룹 최원석회장과 동아건설 유성룡 사장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5백만 농민과 민족앞에 사죄하라.(전농, 4.28)
-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농업회의소 발기인대회 참석자, 4.29)

-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한여농 등 4개단체, 5.4)
- 농민단체의 건의를 모두 수용한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한농연, 5.18)
- 농정현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19개 농민단체, 5.18)
- 정부·여당의 농업희생 의지를 밝힌 ‘당정협의 10개 사항’을 적극 환영하며 이의 조속한 이행을 기대한다.(전농, 5.19)
- 한나라당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법안 제출을 환영한다.
(한농연, 5.21)
- 한나라당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입법 제출을 환영한다.
(전농, 5.22)
- 한나라당의 마사회 농림부 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환영한다
(환원 추진위, 5.22)
- 한농연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에 대해 특혜금융 의혹 공개질의
(한농연, 5.25)
- 정부와 농축협의 상호금융 연체이자 징수유예 조치를 환영한다.
(한농연, 6.1)
- 박성자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의 임명을 환영한다.(한여농, 6.1)
-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은 후안무치한 특혜건의를 철회하라.(한농연, 6.2)
-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이자 징수유예조치를 적극 환영한다.(전농, 6.2)

수신 : 각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

발신 :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편정옥)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전화 3401-9204, 팩스 3401-6549)

□ 성명서

농림부 산하 “여성정책담당관”의 공개채용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편정옥)는 500만 농업인의 적극적인 지지로 출범한 새정부가 농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기획관리실 산하 “여성정책담당관”의 신설은 새정부가 여성농업인을 영농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여성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한여농은 새정부의 여성농업정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정책입안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농업현장의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이 현장의 농업인들을 단지 정책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여농은 새정부의 농림부산하 “여성정책담당관” 신설과 관련하여 과거 정부의 비전문적 내부인사 선출방식이 아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은 모든 여성농업인들의 공동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1998년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농림부 자문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IMF의 험난한 파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업개혁의 닦이 올랐다.

농민이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농민이 존경하는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제 농업이 회생되고 농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두터운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농민의 여론을 생생히 수렴하고 정부와 농민의 가교역할을 활발히 하면서 농민, 소비자, 정부의 공동협력 관계를 증진 시키기 위해 농림부 장관 자문관에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온 개혁적인 인사가 발탁되어야 한다는 뜻을 간곡히 전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료의 집단이기주의가 횡횡할 경우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관계는 조기에 냉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모든 농사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부채가 누증되어 농가파산의 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농민을 설득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과 함께 해나가는 농정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

1998년 3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 장 이 수 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 장 황 장 주

당면 긴급 농정현안에 대해 국회·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건의

IMF한파로 전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때 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낸 이 땅의 5백만 농업인들은 지금 묵묵히 모내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있는 농업인들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농가파탄과 농업기반 소멸이라는 위기에서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농가들이 속속 영농현장을 떠나고 있고, 급격한 영농자재가격의 상승, 불확실한 농가소득, 급증하는 농가부채 등으로 남아 있는 농가들조차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농정의 실패와 IMF한파로 몰아닥친 오늘날의 농업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당국과 여야 3당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식량자급율이 25%에도 못미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농업인의 영농포기는 결국 쌀을 포함한 국내농업생산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식량대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백만 농업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2년 연속 대풍이 있었기에 IMF사태하에서도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식량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은 IMF사태를 맞아 국가경제를 더 이상의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농철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의 버팀목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경우 물가폭등, 식량대란, 식량수입에 따른 외화사용 등 국민이 겪어야 할 IMF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실의와 불안에 떨고 있는 농업인에게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임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이에 5백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인 부담 경감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여야 3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선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영농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추곡수매 약정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추곡수매약정가는 8% 이상 인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추곡수매가는 단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환율상승으로 경영비 인상 요인이 9.7%에 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추곡수매약정가가 동결된다면 쌀부족사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5%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농림부는 대출금리 인상시 30%에 달하는 농가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가를 파산지경으로 몰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대선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농가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대출금리 인상은 농가파산을 부채질 할 뿐입니다.

셋째, 파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경유가격 인하 및 면세유 공급확대, 한우수매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강요받는 속에서도 한우를 지켜온 대다수 농가들이 한우생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유류값 인상과 소비위축으로 시설원예농가는 막대한 이자를 감당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야 3당은 이상과 같은 건의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켜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의 버팀목으로서 농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째, 농가의 재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자구적인 생존노력마저도 무위로 되돌리고 있는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여야 정당,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가부채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3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 창 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수 금

□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 黃昌柱)

● 추곡수매가 5.5% 인상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98년 추곡수매가를 5.5%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농업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농연과 전농이 공동으로 제시했던 최소 8% 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선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5.5%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다소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흔적은 충분히 발견된다. 과거 문민정부 5년 동안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4년이나 수매가가 동결되었던 것에 비하면 미흡하나마 이번 인상조치에 대해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한 결과로 본다.

그리고 수매가의 인상에 따른 수매량의 축소에 대해 RPC 등 민간유통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고심이 엿보인다.

한농연은 수매가 인상요구가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농업·농민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보고자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추곡수매가 인상문제에서 보여준 고심의 흔적을 더욱 진전시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의와 좌절에 빠진 농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1998년 3월 2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황창주, 黃昌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 3401-6543, FAX 3401-6549

- 농어업인 천대하는 정치권을 규탄한다 ●
-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현행대로 5%로 유지되어야 한다 -

추경예산안 처리에서 정치권은 농업인의 간절한 애원마저도 짓밟아버렸다. IMF사태와 농정실패로 인해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는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인상하고만 것이다.

한농연은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상으로 농촌경제가 완전히 파산하고 농업생산마저도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농업정책금리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결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으며 농림부와 해양농림수산위원회의 결의 등으로 최소한 금리문제만큼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농업인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실업대책으로 1조1천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농어촌지원사업비는 고작 913억원이 늘어 결국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6.5%로 상승되고 만 것이다. 처음부터 도후농박(都厚農薄)의 원칙까지 있었다고 한다. 도시민의 귀농지원을 위한 예산도 농업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파산의 위기에 처한 농촌현실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도시인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할 만큼 농촌이 잘산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농업인들이 능력이 없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것인가?

농촌경제의 황폐화가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사기와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정치권에 대해 농업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당시 농가부채가 2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던 현 여권이 실효성있는 부채경감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는 금리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가? 또한 거대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를 막아내지 못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

한농연은 정치권의 농업인 홀대에 강력히 항의하며 파탄지경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998년 3월 2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황창주, 黃昌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 3401-6543, FAX 3401-6549

성명서

- 국회의 농업정책금리 6.5% 결정에 분노하며 -

국회 본회의에서의 농업정책금리 6.5% 결정에 대해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5%로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본회의가 6.5%로 인상한 조치는 IMF체제로 사상 최대의 위기국면에 있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국회의 안이한 대처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환율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각종 영농자재가의 급등과 이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엄청난 상황에서 경영압박의 가중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농림해양수산위 결정수준을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 농민들에게 국회는 분노를 유발시키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 농정공약 중 가장 관심을 끈 분야가 농가 부채경감 문제이지만 금리 인상이 추진될 경우 더욱 큰 부채를 농민에게 안겨줄 것이므로 농민의 기대가 오히려 한숨으로 바뀌게 되었다. 정책금리 인상시 상환능력 상실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조사마저 무시 당한 채 허탈한 심정이다. 농업문제에 대해 너무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정치권에 우리는 또 다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구호는 무성하면서도 이번 농업정책자금 금리 문제에서 농민요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우리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상결정에 분노하면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조치 등 정상적인 농업생산이 지속될 수 있는 조치가 없이는 농업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1998년 3월 26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보 도 자 료

수 신 : 각언론사 담당기자님

발 신 : 여성농업인단체

연락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화 529-6349

성 명 서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여성농업인단체의 입장

농림부가 주요 농업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과정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정현안 등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농민단체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농정개혁위원회는 생산자농민단체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를 포괄하는 폭넓은 구성으로 국가식량산업으로서의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새정부의 농정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나라 농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통일농업과 환경농업 등 앞으로의 우리농업발전 방향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배제되었음에 대하여 여성농업인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새정부가 진정으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개혁을 이루고 농민의 생활이 보장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농업생산과 농촌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농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마땅하다.

이에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정개혁위원회 위원구성에 여성농업인단체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농림부와 농정개혁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 리 의 주 장

1. 농림부산하 농정개혁위원회와 유통개혁위원회에 여성농업인단체 위원을 추가 선임하라.
1. 이후로 구성되는 농림부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라.
1. 농림부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

1998년 4월 2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고송자,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편정옥, (사)생활개선중앙회장 이하자,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박순화,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장 박성자

새정부는 식량자금을 포기하려는가?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IMF상황이 도래하자 전국은 혼란에 빠졌다. 온 국민은 땀을 짊어 고생을 감내하고 있으며 새정부는 IMF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은 재벌중심경제, 특혜경제, 특히 부정부패와 소비적인 정경유착 풍토 등이 원인이었고 이를 주도해 온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재벌들이고 큰 기업들이었다.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은 정리해야 한다. 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 좋은 기업으로 국민의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2. IMF상황에서 농업은 국민경제의 효자노릇을 하였다. 쌀의 자급률은 식량의 자급률을 그나마 제고시켰고, 특히 주식의 높은 자급도는 민심을 안정시켰다. 밀가루, 라면, 식용유가 품절됐던 사태가 바로 얼마전이었던 것이다.

새정부는 농업분야의 과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이익을 보던 유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편을 추진한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으로 천명하였다.

3. 김포 간척지는 동아건설이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하였고 91년 1월8일에 준공인가를 받았다. 준공당시 매립면적은 1,649ha였으며 인가시 동아건설의 투자사업비는 827억원이었다. 농림부는 93년 12월부터 97년 4월 사이 8차례나 동아건설에 농업용수 공급을 촉구하였으며, 97년 7월 19일 동아건설은 자사부담 용수공급을 농림부에 통보했고, 97년 12월 30일 용수로공사 착공 통보를 하였다.

민간기업이 간척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70년대 후반 중동경기의 침체로 건설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철수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코자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식량증산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추진되던 때라 78년 8월16일 대통령령에 의해 민간사업 간척사업 방침이 확정된 것이다. 이때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를,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를 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현재까지 매립목적인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다. 97년도에는 벼재배 41ha, 잔디재배 41ha에 불과하여 거의 방치하였다.

반면 동아건설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9천억원이나 되므로 투자사업비용 포함한 매립비용 전부를 빼도 이미 약 7,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으며 용도변경까지 하면 공시지가가 10조원에 달해 10배나 되는 이익을 다시 보게 된다.

여기에 바로 동아건설의 용도변경기도 이유가 있다. 동아건설은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4. 그동안 정부는 동아건설에 당초 농업목적으로의 매립지 이용을 누차 촉구하여 왔고 이미 동아건설은 97년 12월 15일 용수로공사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12월 30일 용수로공사 착공을 정부에 통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된 방침으로 김포매립농지를 정상화시켜 98년 영농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타용도로 전용을 해 줄 경우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와 전국의 우수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동아건설에는 엄청난 특혜를, 정치권에는 특혜시비등 부작용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전국의 농지가 용도변경되어 쌀자급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5. 문민정부에서 개혁과 사정을 서슬이 퍼렇게 추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만은 지키겠다던 공약을 못지킨 이유로 국민들에게 정부출범이후 첫 사과를 하였다. UR 비준시기 농업관련 분야에서 나타난 문민정부 개혁의 허구가 드러나면서 정치적 추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48.8%의 높은 농촌·농업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농민들은 국가적 상황의 어려움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도 기대이거니와 농업의 발전과 식량자급 기반이 국민경제의 뿌리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자급 기반이 무너지면 농민들은 더이상 갈 데가 없게 된다. 농업은 발전이 불가능하며 식량자급률은 추락하게 되고 농민들은 걸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6. 새 정부는 식량자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김포 매립농지의 용도변경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동아건설은 김포 간척지의 용도변경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기업으로 남기위해서라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500만 농민들과 함께 김포매립농지의 용도변경을 막기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8년 4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李水金)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전화)529-6347 팩스)529-6348

“동아건설의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최근 정부와 인천시, 동아건설 등의 김포간척 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개발 논의에 깊은 우려를 갖고, 우리농어촌살리기운동 인천교구본부와 우리밀살리기운동 인천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입장을 지지하며 김포간척매립지의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70년대 후반 중동진출 건설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원수하면서 78년 8월 16일 대동경령에 의해 시작된 대규모 토목공사 민간기업의 진척사업은 국가안모자원에서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를,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를 매립하게 되었다.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를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하였고, 91년 1월 8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당시 매립면적은 1,649ha, 투자사업비는 827억원이었다. 이후 농림부는 동아건설측에 93년 12월에서 97년 11월 사이 8차제나 농업용수공급을 촉구하였으나 동아건설은 97년 12월 30일에야 용수로 공사착공통보를 하였다. 그동안 겨우 벼와 잔디를 각각 41ha 만을 재배하고 거의 방치하였다.

동아건설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9천억원이므로 투자사업비를 빼도 이미 약 7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으며, 용도변경까지 하면 공시지가가 10조원이나 되어 10배나 되는 이익을 다시 보게 된다.

용도변경을 기도하는 것은 이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셈 아닌가? 세계적인 이상 기후와 사막화로 곡물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세계적인 식량대란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식량자급율은 25%(쌀 제외 5%)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북한 식량난에, IMF환난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제감하고 있는 중 아닌가?

정부는 일관되게 김포매립농지를 식량생산에 쓰도록 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환케될 경우 현대건설 서산간척지를 비롯한 다른 간척지의 농지전용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엄청난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며, 무엇보다 전국의 농지가 줄어 쌀자급 기반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김포매립지는 천혜의 자원인 갯벌을 잃고 얻은 소중한 농경지이다. 기초식량자급은 민족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김포간척매립지는 당초 매립 목적대로 식량생산을 위한 농경지로 쓰여져야 한다.

1. 정보와 인천시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가 본래 목적대로 농경지로 쓰이도록 용도변경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동아건설등 재벌그룹은 천혜의 자원갯벌을 대신해 얻은 농토인 김포간척지를 용도변경하여 개발차익을 노려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식량대란이란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1998년 4월 9일

한국가톨릭농민회/(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전국본부/수원교구/춘천교구/원주교구/경주교구/전주교구/광주교구/안동교구/마산교구농민회
(사)우리농촌살리기운동서울교구본부/인원교구본부/수원교구본부/경주교구본부/대전교구본부/광주교구본부/
안동교구본부/대구교구본부/마산교구본부/부산교구본부

●●●●
성명서

●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반대한다 ●

- 제2기 농어촌구조개선 투자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 -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없앨 것이라는 주장이 재경부와 새재발 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편화한다는 데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 농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농업예산 축소논쟁을 주도해온 재경부가 농어촌발전을 위한 자원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특세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농특세는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해 국민적인 합의 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자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인의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시행 3년만에 폐지 운운하는 것은 IMF로 고통받는 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집권기간 동안 40조원 이상의 농업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자원마련대책으로 농특세의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농어촌투자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농특세 폐지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농업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농업구조개선 투자를 목적으로 거두던 세금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농업구조개선 투자에 예산이 편성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동안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경제관료들의 농업경시, 농업투자 무용론 등을 감안할 경우 농특세의 폐지는 농업예산의 일방적 축소로 연결될 뿐이다.

이러한 농업인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새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의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는한 농특세의 폐지는 있을 수 없다. 농업인을 실망시키는 않는 정부가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98년 4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농 성명서 □

쌀자급기반이 무너지면, 국민 경제가 무너진다.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동아건설 유성룡 사장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5백만 농민과 민족앞에 사죄하라!

1.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반대한다!

쌀자급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해방이후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IMF사태에서 농업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그동안 온갖 부조리와 병폐를 뜯어고치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회전반의 기쁨을 빼고 있는 이때, 동아건설은 농민과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쌀까지 모자랐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끔찍한 일이다.

2. 쌀자급기반이 흔들리는데도 용도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동아건설은 민족앞에 사죄하라!

매년 농지면적이 3만ha(9천만평)씩 감소하고 있고, 김포매립지 매립면적은 1백98만평으로 이는 여의도 부지면적(87만평)의 5.7배에 해당된다. 현재 식량자급률은 26%, 쌀을 제외하고는 4.5%이다. 현재 32,300ha 공업용지중 비분양된 용지가 9,600ha이고, 분양되어 계약이 끝난 단지의 경우에도 12%가 휴·폐업을 하고 있다. 높고있는 땅이 이렇게 많은데도 굳이 농지를 공업용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내 최대의 규모인 4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첨단산업 및 물류,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공시지가가 현재의 10배가 넘는 10조원에 달해 개발이익금을 정부에 환원하더라도, 시세차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외자유치 운운하며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동아 건설은 민족 앞 사죄하라!

3.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기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농은 지난 4월 8일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발표이후 농림부와 동아건설,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농림부의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확인하였고, 동아건설 유홍근 이사로부터 용도변경을 동아건설이 앞장서서 하지는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4월10일 동아건설 본사 앞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반대 전국농민비상대표자대회를 열어 농지로 조성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와 전국의 무수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어 식량자급기반이 무너지고 특혜시비 등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임을 정부와 국민회의에 촉구하였다.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4. 동아건설은 수차례 스스로 발언한 약속대로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 방침을 철회하라!

동아건설은 97년 7월 19일 자사비용부담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동년 12월 19일 농림부에 착공통보를 하였다. 온 98년 4월 17일 최원석 회장과 유성룡 사장이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런 경우 용수로 건설(영농기반조성) 비용이라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김포간척지에 대한 정부입장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동아건설 유성룡 사장이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을 또다시 찾아와 "인천매립지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조성계획서"를 전달하면서, 4월27일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실을 4. 27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동아건설은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마저 우롱한 것이다.

5.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밝힌 내용에서와 같이 주곡의 안정을 위해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기도를 꼭 막아내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러한 동아건설의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하며 식량자급을 위해 농지확보가 절실하며, 동아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농림부는 4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쌀자급 기반인 적정 농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우량농지를 보전한 것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쌀자급 정책을 확고히 한 것이며,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기도를 적극 막아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량자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농지확보를 통한 쌀자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과 유성룡 사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기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투쟁도 불사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98년 4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 장 이 수 금(李水金)

□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 □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농업회의소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우리 34개 단체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추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아건설은 공공자산인 갯벌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이미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약 7천억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10초에 이르는 지가상승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IMF 위기 하에서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이 때, 방만한 운영으로 위기를 초래한 재벌기업이 오히려 IMF를 교묘히 악용하여 민주적 시장경제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정부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5백만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이 재벌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며, 수십년 동안 농민과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해 온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더구나 동아건설은 이미 정부에 수차례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작업과 로비를 하며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있다. 만약 용도변경이 허용된다면 국가의 공신력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IMF를 극복할 주체인 국민은 도덕적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IMF 이후 농수산물 수입에 많은 외화가 지출되고 있다. 식량, 특히 쌀의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술한 시련속에서 식량자급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농업인은 동아건설의 이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건설이 즉각 용도변경 의도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김포매립지가 농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8년 4월 29일

농업회의소 발기인대회 참석자 일동

수 신 : 관련단체담당자, 담당기자
발 신 : 여성농업인단체
연락처 :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화 3401-9204, 전송 3401-6549

성명서

-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

갑자기 도래한 IMF 위기로 인한 나라경제의 어려움에도 온 국민은 극복의지를 갖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IMF의 상황하에 식량이 단지 먹거리라기 보다는 국기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현 경제상황의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인 일부 재벌의 행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국민적 노력과 순수한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동아건설은 농림부의 용도변경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경기활성화, 고용창출의 효과를 제기하며 꾸준히 간척지 개발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지 개발로 발생하는 천문학적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용도변경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농업인들이 겪을 심각한 박탈감, 영농의욕의 상실과 농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향후 식량자급기반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에 여성농업인단체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기도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를 자사의 이익보다는 국기보호차원의 용지로 받아들이고 용도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농림부 업무보고시 대통령이 밝힌 우량농지 확보와 쌀자급을 위한 농지확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편정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회장 고송자)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회장 이하자)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박순화)

□ 논평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黃昌柱) 02-3401-6543

● 농민단체의 건의를 모두 수용한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

--- 당정협의 10개 사항의 조속하고도 차질없는 이행을 기대한다 ---

한농연 5월 18일 당정협의 결과 발표한 10개 사항에 대해 500만 농업인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오늘의 당정협의 결과는 5백만 농업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오늘 오전에 한농연을 비롯한 19개 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건의한 사항 모두를 수용했다고 보여진다.

한농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통령령의 농업에 대한 의지와 애정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정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불가, 농가부채 민관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특별회계를 통한 농특세 재원의 유지, 각도별 농산물검사소의 존치, 우유 및 동물약품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대책, 농업회의소 법제화, 생협법 제정 등은 대통령령의 공약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과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진다.

한농연은 이번에 발표한 10개 사항이 앞으로 절대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고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시행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둔다.

다시 한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당정은 법제화나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정책시행이 뒤따라야 할 부분은 조속히 정책화하여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

1998년 5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논 평 □

정부·여당의 농업회생 의지를 밝힌 “당정협의 10개 사항”을
적극 환영하며 이의 조속한 이행을 기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5월 18일 당정협의한 10개 사항이 IMF이후 농업회생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농업현안의 긴급한 과제를 대부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협의결과를 통해 보여진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의지는 파산임도에 있는 농민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될 것이다.

농업현안중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농가부채조사 협의회 설치와 농이존특별세 유지와 계속적인 추진 등의 정책 제시, 특히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불가에 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기쁨 함함으로써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전농은 농가부채조사협의회가 단순히 실무차원의 위원회가 아닌 농가부채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농가부채 해결에 대해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등을 포함한 정부당국의 분명한 정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확대하여, 시설원예농가 등 파산임도에 있는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을 폭넓게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금번 당정협의 결과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며, 향후 조속한 이행과 제반조치를 강구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전농은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단없는 정책개혁과 이행으로 국가경제 회생, 농업회생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5백만 농민과 더불어 식량자급과 농업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98년 5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 는 평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黃昌柱, ☎ 3401-6543)

○ 한나라당의 한국마사회 농립부 환원 관련 법안 제출을 환영한다 ○

한나라당 소속 3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마사회를 농립부로 환원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제출한 것에 대해 커다란 환영을 표시한다.

마사회의 농립부 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각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새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서 제외되어 많은 농업인에 실망을 안겨준바 있다. 그리고 많은 농민단체들은 서명운동 전개, 한국마사회 농립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마사회의 농립부 환원운동을 벌였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19개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각당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농립부 환원 추진위원회가 발의한 [의원 200인 정원운동]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한나라당이 밝혔듯이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신속한 대응은 IMF사태 등으로 농가파산의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여겨진다.

정부여당도 지난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마사회의 농립부 환원을 확정하 바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마사회의 농립부 환원이 농가파산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27조원의 농가부채에 대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민생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보여준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에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98년 5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논평 □

한나라당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입법 제출을 환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5월 21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34인의 공동발의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의 신속한 법률안 제출은 파산위기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난 18일 정부·이당도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권명한 바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공능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공동으로 가담 주요 정책책임자에게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에 대한 견의와 59개 단체가 참여하여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운동, 국회의원 200인 청원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러 농민단체들과 함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해 계속 활동 할 것이며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환영하는 바이다.

1998월 5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한나라당의 마사회 농림부 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현욱 의원등 34인이 공동으로 지난 21일 제출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것에 대해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농민의 숙원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나라당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지난 국회의 정부 출범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어 전국의 양축가를 비롯 농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농축산 관련 68개 단체가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회의원 200명 서약 받기」운동을 추진하는 중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지난 당정회의를 통해 농림부 환원 절차를 연내에 마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절차만 마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모두 나서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으로 농가부채 해결의 재원 마련과 편법으로 잘못 이관된 관할권을 제자리에 옮겨놓는 일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환영한다.

1998. 5. 22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 02-588-7055, 팩스 : 584-5144)

농민회총연맹,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종축계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학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복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

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
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
가
축부노자원화협회,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대한수의학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수의공중보건
학회(무순)

□ 보도자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黃昌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전화 : 3401-6543)

□ 한농연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에 대해 특혜금융 의혹 공개질의 □

한농연은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지가의 세배에 달하는 용자를 제공하고, 이 부실용자를 보전하기 위해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채권은행단에 강력한 항의성 공개질의 하였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은 동아건설에 김포매립지 지가 9천3백억원의 3배에 달하는 특혜성 담보를 설정하여 부실기업을 연명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려해도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담보평가액을 설정하여 가슴 아팠던 경험을 가진 수백만 일반 서민들이나, 담보가 부족하여 단 몇백만원이 없어 수천만원이 늘어간 추사나 농업용 시설을 포기해야 했던 농민들에게는 강한 분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특혜인 것이다.

한농연은 채권은행단이 중복담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사전에 파악했다면 중복담보를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용도변경을 염두에 둔 담보설정이 아닌지와, 은행단이 이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여 왔는데, 최근 토지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매립지의 개발은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특혜시비와 개발타당성이 없는 현실에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포기하고, 농업용 개발의지를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였다.

한농연은 오는 28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채권은행단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행동을 조직할 예정이다.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채권은행단은 김포매립지의 최고 공시지가가 9천3백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2배에 달하는 1조9천억을 담보로 설정해 주었고, 최근의 협조용자까지 포함하면 2조 5천억원의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고 한다.
 - 은행간의 중복 담보설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는가?
 -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중복 담보를 계속 설정해 준 경위는 무엇인가?
 - '용도변경'시 초과 담보설정이 부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설정해 주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2. 시중가격보다도 담보가격설정이 안되어 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의 현실과 비교하면,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초과담보설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3. 채권은행단은 동아에 대한 협조용자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같이 개별기업의 협조용자에 대한 전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4. 채권은행단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며, 외자유치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공사의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포매립지 개발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충분한 매립을 하지 않은 상태라 지반침하를 막

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한 점 등 추가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개발 수요도 불투명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다른 경쟁 개발지역에 비해 개발원가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러한 토지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하는 아무런 근거없이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단은 이같은 토지공사의 사업성 검토보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이에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기 바란다.

5. 특혜시비와 개발여건의 현실적인 불리함 등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채권은행단은 더이상 용도변경 논란이 계속되어 국가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당장 '용도변경 의사 철회' 및 '김포매립지의 농업용 개발 의지 확인'을 공식적으로 밝힐 용의는 없는가?

6. 이상과 같은 공개질의에 대해 5월 28일 오후 2시까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1998년 5월 25일

사)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 논평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황창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전화: 02-3401-6543)

□ 정부와 농·축협이 상호금융 연체이자 징수유예 조치를 환영한다 □

정부와 농·축협은 5월 30일 IMF로 인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상호금융자금 연체이자 부담경감 등의 조치는 파산의 위험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정부와 농축협이 농가부채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큰 희망과 위안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농연은 IMF를 만이하여 농어의 가장 시급한 희망으로서 농가부채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농가부채해결의 한 방안으로 마사회 이관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해결방안 마련을 계속 촉구하였다. 이번 결정은 이런 한농연의 지속적인 농가부채 해결활동에 대한 첫 답변으로서 소중하다 하겠다.

상호금융자금의 연체이자 징수유예는 농가부채해결의 첫걸음이다. 이 소중한 첫걸음을 더욱 발전시켜 농업인을 위축시키고 있는 농가부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농업인과 정부, 농축협 및 관련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지난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농가부채조사협의회'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기를 재차 주장한다.

다시 한번 정부와 농축협의 농가부채 해결의 의지를 환영하며, 현장의 농업인들이 이번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부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다.

199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 신 : 관련단체담당자, 담당기자
발 신 :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화 3401-9204, 전송 3401-6549

□ 성명서 □

박성자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의 임명을 환영한다

-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농림부의 개혁의지를 환영한다 -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편정옥)는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박성자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소장이 최종 확정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여성정책담당관을 내부인사 임용방식이 아닌 현장 경험과 전문성만으로 외부인사를 공개채용한 농림부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초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확정된 박성자 소장은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정책과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 권익증진과 위상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여성농업인계 인사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여성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고루 갖춘 인사가 초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결정된 것은 여성농업정책에 개선과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박성자 소장이 법적·제도적 부조리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 여성농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또한 신설부서 초대 담당관으로서 정형화된 공무원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신과 추진력을 갖고 산적한 여성농업과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199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공동성명서 ■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전화 : 3481-6543, 담당 : 김기태)

□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은 후안무치한 특혜건의를 철회하라 □

우리는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재정경제부에 특혜지원을 건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가슴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만약 채권은행단이 특혜지원 건의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국민의 감정을 계속 무시하고 한점의 고등본답도 거부한다면 강력한 항의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은 대책회의를 갖고 김포매립지를 공시지가(9,348억원)로 매수하여 주고 공영개발 이익으로 김포매립지를 담보로 한 지원여신의 6천억원 우선상환과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근저당권 해당채권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외의 2개 항목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내용에 따르면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우선 국가가 매입한 9천억으로 발등의 불을 끄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잡음은 국가가 모두 감수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나오면 은행에게 무조건적인 특혜를 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라 자그마치 1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하에서 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정상적이고 흑자를 내는 기업도 몇천만원이 부족하여 부도를 내고 있다. IMF로 인해 실업자가 수백만에 이르러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재원이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미흡하다. 이같이 총체적인 경제불황으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무조건 채권은행단만 살려달라는 어린이 같은 건의를 감히 할 수 있는 채권은행단이 과연 온당한 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원석 전입회장도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이 국민의 감정에 정면으로 대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마 "개발이익을 전액 국가에 환수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사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동아개발에 6천억의 특혜금융을 대출하여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 채권은행단이 다시 금 국가에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하고 개발이익을 무상으로 지급하라고 특혜를 요청하는 것은 IMF를 초래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은행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여실히 보여준다. 은행권이 IMF를 초래한데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온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려는 양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재정경제부에 제기한 특혜지원 건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 명백히 밝혀둔다. 만약 정부가 채권은행단의 특혜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모든 경제개혁정책은 현실적으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는 IMF로 고통받고 있는 4천만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각 채권은행단의 특혜건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채권은행단이 획책하고 있는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부실금융의 보전과 국가의 특혜지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국민들과 시민환경사회농민단체들은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회생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희생되

는 것을 더 이상 적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1.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은 국가의 특혜지원 건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김포매립지의 국가매입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채권은행단의 특혜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3.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계획을 철회하라.

1998년 6월 2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소비자.시민.농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YMCA / 가톨릭정의구현사제단 /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녹색연합 / 농지개발조합연합회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 우리밀살리기운동 인천본부 / 우리농어촌살리기운동 인천본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한살림 / 환경과 공해연구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인천본부 / 봉사단 (이상 20개 단체)

□논평□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이자 징수유예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농림부와 농·축협이 IMF사태를 맞아 파산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협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정상대출금으로의 전환과 상호금융의 상환연기, 대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에 대해 500만 농민과 더불어 이를 적극 환영한다.

농민들은 그동안 불가상승론에 편승 못미치는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해 부채가 누적되어 왔으며 IMF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시켜 농자세값의 폭등과 농축산물 값의 폭락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농가가 연체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농가파산과 농업생산중단 위기로부터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농업금융구조의 개혁,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농정개혁의 시발점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정부와 농·축협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500만 농민들의 영농의욕과 책임감을 북돋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이 농업회생과 식량자급을 위한 농위대개혁의 험난한 과정에서 함께 신뢰하고 힘을 합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한번 정부와 농·축협의 상호금융 연체이자 징수유예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

1998년 6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의 정부」 100일 주요 농정일지

여 백

주요 분야별 농정일지(요약)

1. 「농·소·정」이 협력하는 「열린농정」추진체계 구축 135
2.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대책 138
3. '98년 4대 농정과제 추진상황 141
 - 주곡자급, 유통개혁,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4. 100대 국정과제 등 주요 농정개혁 과제 실천상황 151
5. 농업분야 통상협력 추진 155
6.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158
7. 농정홍보·교육 및 조직운영 활성화 159

여 백

1. 『농·소·정』이 협력하는 『열린농정』추진체계 구축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소·정 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구축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 간척농지 분양관련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행어업 보상, 분양대금 상환조건 완화 등에 대해 농민 대표들과 협의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청산 한우단지 방문, 한우농가와 간담회 - 경기 안성 민준 양돈농장 방문, 양돈농가 등과 간담회 - 경기 안성공업단지내 대상사료공장 방문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농업인 등 27명 참석, 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협의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남사면 화훼농가 등과 간담회(유리온실) - 경기 용인 포곡면 비닐채소농가와 간담회 - 양재동 물류센터 방문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실연 등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창립대회 산림청장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시대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 등 1석 3조의 효과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개혁위원회 1차회의(2차회의 :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및 장관님 인사말씀 - 차관보, 서울대 김완배교수 공동위원장 주재, 30명 참석 - 그동안 제기된 유통의 문제점과 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개혁위원회 1차회의 (2차회의 :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및 장관님 인사말씀 - 차관, 서울대 김호탁교수 공동위원장 주재, 28명 참석

일시	주요 업무 추진
3.27	○ 농산물유통개선 토론회, 장관님 격려사 - 주최 :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4. 2	○ 농촌지도자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 국가안정의 근간으로서 식량자급을 제고방안 협의
4. 4	○ 제주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 북제주군 조천읍 선양목장 방문, 한우 및 돼지 사육농가와 간담회 - 북제주군 조천읍 화훼단지 방문, 현지농가와 간담회 - 제주시 아라동 시설감귤농가 방문
4. 9	○ 안성 축산물 종합처리장 준공식 참석, 장관님 격려사
4.10	○ 경북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 경북 군위군 축산농가 방문 및 간담회 - 경북 영천시 과수농가 방문 및 간담회 - 경북 경주시 화훼단지 방문 및 간담회
4.13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1차회의(2차회의 : 4.28) - 현판식 및 장관님 인사말씀 - 기획관리실장, 협동조합연구소 황민영 이사장 공동위원장 주재, 19명 참석
4.14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추진유공자에 장관표창 계획결정
4.29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사무실 개소식, 장관님 축사 -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국민운동 운영위원 등 참석
5. 6	○ 「꽃 생활화 촉진대회」에 참석, 총리축사 대독 - 광화문에서 꽃 생활화 촉진을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

일시	주요 업무 추진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발전추진위원회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학계, 언론계 전문가 참석 - IMF 시대 축산업의 어려움 극복방안 협의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과자울협의회 참석,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소·상·정 자울 협력체제로 과잉생산 양과수급안정대책 추진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여주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여주군 화훼단지 방문 및 간담회 - 임협중앙회,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업무보고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양평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 조안면 시설채소농가 방문 - 양평군 양서면 축산농가 및 톱밥축사시설 농가 방문 -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가 방문 및 유기농산물 시식회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소비촉진운동 대회참가 및 도보행진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소·정 위원회 원로회의, 회의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농정추진상황 보고 및 자문, 오찬 ○ 생명의 숲, 문인의 밤 행사 참석, 장관님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소비촉진 결의대회 및 「농·소·상·정」 협약체결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지역 「이동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농법 연사회 행사 참석 및 장관님 격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여성민우회, 정농생협 등 생산자·소비자 1,000여명 참석

2.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대책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 발대식」 장관님 참석,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시민단체 주관, 농림부 참여 후원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추곡수매가 인상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추곡수매가 5.5% 인상, 수매량 770만석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의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농특회계 등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상요인 3.5%P중 2%P를 재정에서 흡수('98 추경예산 1,790억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회계 및 농·축산 경영자금 금리 1.5%P 인상(4.15) - 농안기금, 축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농림부 소관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 ('97년말 대출잔액 : 6조 1,619억원)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리 유지(4.6) ○ 농업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원에 및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3~6개월 연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 3,185억원, 시설원에 45억원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확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축산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 6,500억원을 늘려서 공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축산경영자금 : ('97) 3조 8,200억원 <li style="padding-left: 40px;">('98) 4조 4,700억원 - 유류 구입자금 등 긴급운전자금 지원 : 3,048억원

일시	주요 업무 추진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살리기 10대지원시책 추진(당정협의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년내에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 구성(4.23) · 62개 단체가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개최(5.27) -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되 통합기관의 도 단위 지소는 도별로 1개소씩 9개소, 시·군 출장소는 주요 시·군별로 118개소를 두고, 중앙 통합기관의 장은 현행대로 1급으로 유지 -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부채협의회』를 설치, 유형별 부채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대표가 참여하는 『농가부채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4.18) · 부채대책 방향설정을 위해 밤샘간담회 실시(5.18~19) -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707억원의 상환을 3개월 연기(5.24시행) - 농특세는 가급적 존치하되, 세제종합개편의 일환으로 본세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15조원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천 - 소수매는 UR/WTO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계속 실시하고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송아지 가격안정대책과 병행 실시

일시	주요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우유 및 분유소비 촉진대책을 적극 추진 - 농산물직거래 지원조항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년내에 제정 - 김포간척지는 당초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사용 - 농업인단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예산조치를 비롯 농업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 <p>6. 1 ○ 농·축협에서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4조원)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조치(이자납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2조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정수를 6~12개월 유예조치 (6.15 시행)

3. '98년 4대 농정과제 추진상황

가. 주곡자급 기반의 확충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 종합 추진본부 설치 및 현판식 - '98 쌀 생산대책 추진계획, 당면영농 추진상황 등 보고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3.11~3.30) - 진흥지역 보호구역내에서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행위 제한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개편방안 강구지시(농검 업무보고시) - 참여농정 차원에서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 참여방안 강구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봄가뭄 대비, 용수대책 추진상황 보고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지구 및 김포간척지 현안사항 보고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3.17~4.16) - 농번기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 수리정비반 편성·운영(수리차량 52대, 107명, 7개 농기계업체 참여) - 긴급고장 수리반 편성운영(5.1~31) : 5개업체 88대 수리차량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추곡약정수매량 시·도별 배정계획 확정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추곡수매 동의안 국회의결 - 수매가 5.5% 인상, 수매량 770만석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대책 추진방향 보고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자 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 주곡자급, 농소정 협력, 유통개혁 등에 대한 농촌지도자들의 협조 당부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실태 확인 점검 실시(4.6~4.23)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과 지역농정 발전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자 등 600명 참석 - 국가안정의 근간으로서의 식량 자급을 제고방안 토론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유 벼 조곡공매(50만석) 실시 방침 결정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의 과학화로 양곡낭비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장관님 특강(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양곡 조작요율 인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요율 : 17.6%, 가공요율 1.6% 인하 - 예산절감효과 115억원 ○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4.13~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건, 23.9ha 적발 → 고발 3건, 원상회복 명령 207건, 기타 20건 조치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쌀 생산대책 평가 및 시장계획 수립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간척지 관련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 불가방침 설명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인원 채용계획 수립(4.2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 채용 3,248명(연인원 13만명), 26억원 지원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곡수매제도 개선방안 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참석 - 추곡수매 제도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 피·잡초 및 병해충 방제대책 연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농촌진흥원에서 각도 담당과장 등 참석 - 피, 잡초 및 병해충 방제대책 및 우수사례 발표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25	○ 양곡증권법 개정안 입법예고(4.25~5.14)
4.27	○ 김포간척지 관련 차관님 기자회견 - 용도변경 불가입장 발표 - 당정협의를(5.18) : 김포매립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활용 ○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 수립·전파계획 시달 - 각도, 농진청, 농협 등에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 농업인 지도·홍보 추진
4.30	○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 국무총리실 제출(국정평가 과제) - 용자수매제의 주요내용, 개선효과 및 문제점, 추진계획 등
5. 6	○ MBC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 장관님 참석 - 쌀, 양파, 분유 제공의사 피력
5. 9	○ 4.15자 벼 재배의향 조사결과 발표 - 벼재배 의향면적 : 1,071천ha('97 재배면적 대비 19천ha 증)
5.14	○ 농약 수급안정대책 협의회 개최
5.15	○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5.18	○ 봄철 농촌일손돕기 행사(경기 이천 대월 군량) - 장관님 등 80여명이 참석, 모내기·과실숙기 등 행사 ※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설치·운영(5.1~6.30)
5.23	○ 붉은곰팡이병 피해보리 수매 관련 대책회의 - 5월초순 잦은비 및 이상고온으로 전체 재배면적 82천ha중 49%에 발생 - 피해보리에 대해 잠정등의 규격을 설정 정부수매 실시
6. 1	○ 병해충 방제대책 상황실 설치 및 현판식 -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설치

나. 농산물 유통구조개혁 추진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하장,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8종, 8,190개소 ○ '97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결과 보고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전자직거래 확대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마이더스 동아 등과 농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 방안 협의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농업인 등 27명 참석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협의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혁 위원회 실무작업반(대책반)가동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대책 차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부 주관, 생필품 집중관리 방안 및 물가 감시기능 강화 방안 등 논의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보고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구성, 1차 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 차관보, 김완배 교수 - 위 원 : 생산자·소비자대표, 유통인, 학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인 ○ 「농산물 직거래 추진상황실」 설치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운영지침 결정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동 물류센타 개장식 참석, 장관님 치사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선 토론회 참석, 장관님 격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 주제 : 유통구조개선으로 소비자가격 더 줄일 수 없나?

일시	주요 업무 추진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전자상거래반 실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코드·거래서식 등 표준화 방향 논의 ○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 및 수출탑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주재 무역확대 대책회의 정례화로 농산물 수출상황 점검 및 수출촉진대책 추진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 4.4~4.23)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동 물류센타 국무총리 방문, 장관님 수행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중앙회 앞마당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식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특별 생방송에 장관 출연 : 직거래 취지 등 설명 ○ 안성 축산물 종합처리장 준공식 참석, 장관님 격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현황 및 운영계획 보고(4.11)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판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4.13,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판로제한 완화, 주류 통신판매 허용, 전통주 세율인하 등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 청사앞 직거래 장터 개장(매주 금·토요일 정기개장)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직거래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보고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안 실무협의 (재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부안에 직거래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조항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방향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재경부, 농림부 등 차관, 생협중앙회, 소비자 단체 등 - 법률제정안 검토의견 재경부 제출(5.4)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참석(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소비자보호원, 우리부 유통관리과장 참석 - 법률제정안 입법예고(6.1~6.20)

일시	주요 업무 추진
5. 1	○ 창동 물류센터 임시개장
5. 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지리적 표시제, 생산자단체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제도 신설 - 법률제정안 입법예고(6.2~6.22)
5.8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2차회의 - 유통개혁 대책 시안검토 ○ 양파 자율협의회 개최 및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100명 참석, 양파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방안 협의 ○ 구리 도매시장 현황 및 활성화대책 보고
5.13	○ 직거래 발전을 위한 간담회 - 농협 및 지역별 담당자들이 참석, 직거래 운영개선 사례 분석 및 향후 대책 논의 - 농·수·축협 등 직거래 추진협의회 개최(5.21)
5.14	○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5.15	○ 유통공사 및 한냉 등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 기획예산위원회 제출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차관님 설명(5.30)
5.20	○ 유통개혁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위원 : 차관보, 유통정책국장, 김완배교수, 왕성우교수, 허길행 연구위원 등
5.22	○ CODEX 식품표시분과위 제26차 회의 참석 - 기간 : 5.22~5.31, 서종혁 자문관 참석
5.29	○ 농산물 브랜드 추진상황보고 - 브랜드 품목수 : 2,197개, 상표등록 건수 : 255개

다. 친환경농업 육성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10	○ 환경농업 교육·홍보계획 수립
3.13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 (장관님 주재) - 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농업인 등 27명 참석 - 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 활성화 방안 협의
	○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시달
3.19	○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 발대식 참석, 장관님 축사 - 농림부가 적극 참여 및 후원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적극 추진
3.26	○ 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제정 실무 작업반회의 -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3.30	○ 농림기술 개발성과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 연구개발결과 D/B구축, 주요 7과제 활용 추진계획 등
4. 2	○ 환경운동연합 창립 5주년 기념식, 장관님 참석(프레스센터) ○ 환경농업 관련단체 간담회 장관님 참석 - 농림부, 농진청, 환경농업단체, 학계, 농협 등 37명 참석 - 환경농업기술개발 등 환경농업 발전방안 협의
4. 6	○ 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초지조성 허가절차 간소화 등 - 초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4.11)
4. 9	○ 환경농업관련 농법 및 자재검증 추진 협의회 - 농진청, 농과원, 유기농법 협회 등 13명 참석
4.10	○ IMF시대의 조사료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농진청) - 부존사료의 효율적 이용방안 협의(축산농가 등 300여명)
4.11	○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계획 수립 - 국무회의 보고(5.26), 심의위원 선정(5.27)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소장회의, 환경농업정책 장관님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소장 등 170명 - 환경농업 정책방향, 흙살리기 운동에 대한 교육 ○ '98 환경농산물 수매지원사업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단체에 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30억원) ○ 환경농업 범국민 운동화 방안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은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협의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이동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유기농산물 시식회 참석 및 간담회 개최(100여명 참석) - 팔당지역 유기농산물 100여 품목 전시 - 양평군수의 양평 환경농업-21 추진계획 발표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불제도 확대도입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 제26차 회의참가(캐나다, 5.21~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분비료 사용시 유기농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국가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우리입장 반영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 환경농산물 판매장확충 및 수매자금 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하나로 마트에 판매장 확대설치 및 수매자금 지원 ('99 : 50억원) ○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99 : 1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지도팀 구성, 집중 지원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환경의 날 행사 참석(환경보전협회 주관, 농림부 후원)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지역 「이동 장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농법 연사회 참석 및 장관님 격려사 - 여성민우회, 정농생협등 1,000여명 참석

라. 수출농업의 본격 추진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관련 「이동장관실」 운영 - 경기 안성 일죽 민준 돼지고기 수출농가 방문 및 간담회개최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농산물 일본 특별기획전 참가(3.10~3.13, 도쿄) - 73업체 참여, 162건 76,966천불 계약 실적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지원체계 강화방안 수립 - 수출애로 상담실 확대(4 → 7개), 20대 수출전략 농산물 선정 및 전담연구팀 운영방안 등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출 대책협의회 - 수출촉진단 파견, 수출단지 확대지정 등 수출촉진방안 논의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수출 대책협의회(3.21, 3.25, 3.27)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산 양파 수출추진협의회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수출 대책협의회 - 농기계 수출업체 참가, 수출애로사항 분석 및 지원대책 협의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수출 대책협의회 ○ 분화수출 대책협의회 - 분화수출의 애로 및 문제점 분석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무역확대대책회의』 개최(장관주재) -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80여명 참석 - 농산물 수출탑 9명 등 수출유공자 26명 시상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과일 수출촉진단 파견(4.5~11) - 유통공사 등 4명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국제 식품기술전 참가(4.6~9) - 농림부장관 현장방문 및 참가업체 격려(4.7) - 47개업체 참가, 34건 5,597천불 계약실적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식품 박람회 참가(4.14~17) - 20개업체 참여, 66건, 5,104천불 수출계약 ○ 수출장미 상표권 관련 협의회 - 대책반구성, 기관별 업무분담 방안 협의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략 농산물에 대한 전담 연구팀 구성 운영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대책 상황실 설치 및 현판식 ○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팀 회의 - 농림부 차관보 팀장으로 품목별 대책반 운영(8개반) - 품목별 수출상황점검, 수출애로요인 파악 및 해소대책 마련 (매월 개최)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수출업체 간담회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카고 식품박람회 참가(5.3~6) - 18개업체 참여, 35건, 10,142천불 수출계약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수출촉진 협의회 - 김치 수출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류 수출협의회 - 수출업체, 관련기관·단체 등 17명 참석 ○ 제1차 농산물 무역협의회 전체 회의(유통공사 주관)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대책 상황실 품목별 대책회의 개최 - 채소반, 인삼반, 채소종자반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상파울로 식품박람회 참가(6.9~12) - 10개 업체, 65개 품목 참가, 5백만불 수출계약 목표

4. 100대 국정과제 등 주요 농정개혁과제 실천상황

가. 주요 업무보고 및 주요기관과 업무협약

일시	주요 업무 추진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묘지 참배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 - 경조사시 화환 진열숫자 제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원칙적인 협의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 면담(1차 : 4.5, 2차 : 4.9) - 남북대화사무국, 비료지원 문제 등 대북지원 관련사항 협의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당면 농정현안 보고 - 당면 영농추진현황, 직거래 추진상황 ○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문 - 농업관련 통상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 당부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주요업무보고 국무총리 사전 보고 ○ 제1차 남북당국 대표회담(4.11~17, 북경)에 농정국장 참석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 - 주곡자급, 유통개혁, 친환경농업·수출농업 육성, 농정추진 체계 개편 등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아태지역 총회 참석결과 총리보고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정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국무조정실 제출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 공동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제의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위원회 주관 예산수요자와의 정책토론회 참가 - 서종혁 자문관 주제발표, 차관등 농림분야 관련인사 8명 참석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부실천계획 수립, 청와대 제출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청과 오찬 간담회 개최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위원회와 오찬 간담회 개최

나. 주요 농정개혁과제 실천상황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유통개혁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 : 2회(3.19, 5.8), 분야별 간담회 : 14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촌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 : 2회(3.26, 5.8), 전문가 토론회 5회 - 실무협의회 : 3회(4.18, 4.25, 5.28)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현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 : 2회(4.13, 4.28) - 실무작업반 회의 : 4회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영혁신계획 수립, 기획예산위원회 제출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국정과제 추진계획 수립, 기획예산위원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국정과제 추진계획 세부설명서 기획예산위원회 제출(5.14)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자율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농진청 농가경영 개선본부 설치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자금제 도입관련 실무토론회 개최(시·도 관계자, 축협·농협 등 참석)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진공, 농유공의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수립, 기획예산위원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차관님 설명(5.30)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추진방안 장관보고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99 예산제도 개선방안 수립, 예산청 제출

다. 축산 및 원예·특작분야 농정추진

일시	주요 업무 추진
	<p>< 축산분야 ></p> <p>'98.3.19 ○ 남은 음식물 사료화운동 발대식 장관님 참석, 축사 -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주관, 한국프레스센터 -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환경보호 추진</p> <p>3.30 ○ 가축방역 시책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 '96.6 수립·추진중인 주요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p> <p>4. 1 ○ 제16차 쇠고기 분기별 협의회 개최(4.1~4.3)</p> <p>4. 3 ○ '98 쇠고기 수급 운영대책 수립</p> <p>4. 4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4~4.23)</p> <p>4.15 ○ 축산경영자금 지원 확대 - '98년 6,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00억원 증가</p> <p>5. 4 ○ 우유 수급안정 관련 협의회 - 차관보 주재, 축협, 유가공협회등 16명 참석</p> <p>5. 6 ○ 소 수매관련 간담회 개최 - 차관보 주재,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관련기관등 참석</p> <p>5.10 ○ 우유 수급안정대책 수립 - 유제품 가격인하, 우유소비확대 홍보·추진, 저능력우 자율도태</p> <p>5.13 ○ 축산분뇨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 공동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제의</p> <p>5.14 ○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차관보 주재, 통일부등 관계부처 10개 참석</p> <p>5.22 ○ 가축질병 특별방역반 발대식 - 축협중앙회 주관, 200여명 참석 - 19개 방역반을 편성, 순회방역 실시(5.22~8.31)</p>

일시	주요 업무 추진
5.26	○ 축산물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및 도보캠페인
5.27	○ 우유소비확대 가두캠페인 ○ 농업인단체의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 실천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한국마사회 환원 추진위원회 주최) - 축협조합장등 350여명 참석 ※ 6.3 현재 국회의원 86명 동의서 제출, 총 12만명 서명
5.29	○ 축산물 브랜드전 및 소비확산 세미나 개최(5.29~30)
5.30	○ 우유소비촉진 결의대회 및 「농·소·상·정」 협약 체결
6. 9	○ 닭고기 요리 강습회 개최
< 원예 · 특작분야 >	
3.28	○ '98년산 양과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 품질저하품 출하억제 및 소비촉진과 수매확대 - 수매 124천톤, 127억원 자금지원
4.14	○ 수출장미 상표권 관련 협의회 개최 및 대책반 구성 - 농협, 유통공사, 절화조합 등 8명 참석
5. 6	○ 건전한 꽃생활화 결의대회 개최 및 가두캠페인 장관님 참석
5. 8	○ 유리온실 부실경영체 정상화대책 수립 - 유리온실 부실경영체 : 경매 · 제3자 인수, 정책자금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보강등 시설개보수 추진 및 지원규모 축소 ○ 양과 자율협의회 참석,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5.29	○ 포도뿌리혹벌레 발생상황 및 방제대책 수립 - 피해상황 정밀조사 실시, 묘목 타지역 반출제한 등

5. 농림분야 통상협력 추진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농업각료회의('98.3.5~3.6)에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이 구본영 OECD 대사에게 지시하여 농업의 다양한 공익성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료 공동선언문에 반영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er USTR 부대표·주한미대사 등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의 어려움 및 새정부 대외농업정책 설명을 통한 이해 및 신뢰 제고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농업부장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n Matthews 농업부장관, 주한 호주대사 등 참석, WTO에서의 우리 입장을 천명, 양국간 농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roeder USDA 부차관보 면담(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M-102 자금중 육류부분 최소사용 필요성에 대한 미국측 이해 제고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농업통상 현안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nt 미농무참사관과 GSM-102 자금추가 사용, 쇠고기 쿼터 소진문제 논의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수출신용자금(EDC) 1.5억불 사용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증없이 업계간 협의로 자율적 사용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los Mladinic 칠레 농업장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검역, 차기농산물 협상, APEC 분야별 조기 자유화, 칠레산 포도수입 관련사항 등에 대한 의견교환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차기협상 실무지원단 협의회 개최(실·국 반원등 21명) - WTO 차기협상관련 의제분석 및 WTO, OECD 농업위원회 참석결과 설명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yle Van Clief 캐나다 농업장관 면담 - APEC, WTO 등 국제회의에서 협력방안 논의 - 한국산 배의 캐나다 수입재개 합의 및 삼계탕 수입 허용 조속 검토 약속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통상정책협의회 개최 - 차기 농산물 협상 추진동향 및 대책 논의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아·태지역 총회 참가(4.21~25) -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자급노력 강화와 농업의 다기능 특성 강조 - 회의 기간중 유일하게 부의장으로 총회 사회 - 일본대표와 WTO 차기협상 대비 공조체제 구축 등 합의 - 중국·몽골 대표와 양국간 협력강화 합의 - 미얀마 농업장관 예방 양국 협력방안 논의 - FAO 사무총장과 대북지원문제, 한국인 진출협조 합의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M-102 자금 5억불 추가사용 합의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hael Dunn 미 농무성 차관보 면담(차관) - 미국 농산물 검역현안 협의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ie Arazi 주한 이스라엘 대사 면담 - 양국간 농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일시	주요 업무 추진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EFIC(금융 및 보험공사)자금 48백만불 사용합의 - GSM-102 자금중 육류사용에 대한 통상마찰 해소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고위 협의회 및 농업전문가 회의 - EU측 : 농업총국 수석담당관 Gowen외 2명, 우리측 : 통상협력과장외 3명 - 모조분유 safeguard 등 통상현안 협의 - 한국산 삼계탕의 대 EU 회원국내 수출문제 협의 - EU의 지역화 인정문제 협의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fael Eitan 이스라엘 부총리겸 농업장관 면담 - 양국간 농업기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한국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 참석 : OECD측 Viatte 국장 등 3인, 우리부 10인 - OECD측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토론, 식량안보·농업의 다기능적 측면등 우리측 관심사항 제기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WTO 각료회의 참가 (5.18~20 : 국제농업국장) - 농산물 수입국들과 협력, 우리입장 반영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통상현안 협의 - 우리측 : 통상협력과장외 1, 미측 : Latimer USTR한국담당관 참석 - 쇠고기 쿼타 이행문제, 대미 수출 농산물 검역완화 등 현안사항 협의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P Roundtable 참가(5.28~29 : 농업정책과장) - 대북한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참여국들에게 설명

6.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특별지원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안내·정보제공 및 기술·경영교육 실시 -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 : 200억원(2,000가구)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대책 추진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분야 실업대책 기획·조정 및 평가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예산확정(395억원,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현재 206개 시·군 667개 사업장에 4,807명 고용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억원(가구당 2,000만원), 연 6.5%, 2년거치 3년상환 ※ 6.8현재 1,856명 신청, 991명 대상자 확정(집행 43억원)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인원 채용 방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0~6.5, 3,248명 고용, 26억원 ※ 6.8현재 2,808명 채용, 765백만원 집행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운영위원 M·T (4.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계획 수립·시달(산림청)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사무실 개소식 장관님 참석, 격려사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5.4~5.16) : 125명, 2차(5.18~5.30) : 138명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숲과 문학의 만남 행사, 장관님 축사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일자리 합동안내센터 설치·운영(6.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역 광장에 『농촌인력은행·숲가꾸기·귀농 합동안내센터』 설치 - 우수소비 캠페인, 꽃사용 생활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 ※ 6.5현재 1,748명 상담, 381명 기록

7. 농정 홍보·교육 및 조직운영 활성화

가. 농정 홍보 및 교육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임명소감 인터뷰 - KBS, YTN, 중앙대 부총장실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기자단 간담회(농림부 출입기자 19명 참석)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말』 인터뷰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 사장단과 간담회 -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 영농신문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 대담 (양기협 사회부장과 전화인터뷰) - 취임소감, 새정부의 농정방향(주곡자급, 유통구조개혁, 친환경 농업, 수출확대), IMF대책, 통일농정 등 ○ KBS 1TV 뉴스라인 대담프로 출연(생방송) - IMF시대 농정방향, 쌀 수매가 결정방향, 농업회의소 등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모닝와이드 출연(생방송) - 새정부 농정방향, 부존자원활용 대책, 쌀 수매가문제 등 ○ 광주 CBS 시사포커스 대담(유한호 교수와 전화인터뷰) - 취임소감, 새정부의 농정방향, 부존자원활용, 쌀 수매가 문제 등 ○ 『농어촌진흥』지 인터뷰 - 현장방문소감, 산하기관 조직정비, 주요 농정방향 등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대담(권혁찬 기자, 장관실) - WTO/IMF시대 농정방향, 북한과 농업교류 협력방안, 농·축협 등 개편문제 등

일시	주요 업무 추진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연구소 '98 정기총회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국민의 정부 주요 농정방향 ○ Korea herald 인터뷰 (이갑수 차장,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수매가 문제, OECD 각료회의 성과, WTO 차기협상 등 ○ MBN-TV 대담(김석규 정경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IMF 시대의 농정방향, 쌀 수매가 문제 등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MBC 대담(윤용선 보도국장,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부존자원 활용, 쌀 수매가 및 약정수매 선급금비율 인상문제, 농가부채 문제 등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 출입기자 합동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 한국영농신문 - 새정부의 주요 농정방향, 쌀 수매가, 농가부채, 농업회의소 등 당면 농정현안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아침 대담프로 출연(생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주요 농정방향, 수매가인상, 농업회의소 등 ○ K-TV 국정대담(카톨릭대학 이영자교수,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북한식량문제, 수매가인상, 귀농지원, 농·소·정 협력방안, 농업회의소 등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대담(곽영일 경제부장, 박학용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수매가인상, 농가부채 문제 ○ Korea Times 대담(심재윤 기자,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OECD 각료회의 성과 등 ○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출입기자 및 전출기자 5명 참석

일시	주요 업무 추진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라디오 성공적인 귀농전략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에 대한 정부지원시책 설명 ○ KBS 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 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민영 농어민신문 사장과 대담 - 주요 농정방향 및 북한과 농업교류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라디오 전화인터뷰(박찬숙 앵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농정방향 설명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스페셜 대담 녹화(김순영 앵커), 방영 :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소감, 주요 농정방향, 농가부채대책, 귀농지원대책, WTO 차기협상, 농업회의소 등 ○ Korea Agra Food지 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및 차기협상 관련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국민의 정부 주요 농정방향 -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 200명 참석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 신문사 인터뷰(정주연 지역부장,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농정평가, 새정부 농정방향, WTO 차기협상, 농가부채, 농소정 협력체제 등 ○ 농정여론 주체에 대한 농정자료 제공 3차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의 주체와 참여자인 농업인,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약 450여곳에 각종 농업 정책자료 송부 - 1차송부(4.11) : 추곡약정수매 시행방안, 업무보고결과 등 11건 - 2차송부(4.30) : 동아매립지 보도자료 등 4건 - 3차송부(5.26) : 대통령말씀 및 농림분야 후속조치 등 4건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의 과학화로 양곡낭비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주부지도자 등 700여명 참석 - 새정부의 농정방향, 남은 음식물 사료화 등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라디오 서울전망대 대담(김종찬 MC, 생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귀농대책, 농가부채대책, 농업회의소 등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 대담 (생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육성, 유통구조개혁, 식량자급, 북한 식량지원, 귀농 대책, 농가부채대책 등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매일신문 대담(장여진 차장,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 광주 제2도매시장 건립지원, 전남 농업지원대책, 쌀값 계절진폭, 귀농대책 등 ○ 산학연 21 대담(황선우 발행인,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소감, 새정부의 농정방향, 농지전용 억제대책, 수매가, 농업계학교 지원, 농가부채대책, WTO 차기협상 등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KBS 특별기획 대담(조선대 양형일 교수,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 중심의 한국형 농업구조조정, 해남참다래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 농업통계의 과학화, 귀농대책, 환경농업정책 등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MBC 취재현장 800 대담(김선태 보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소감, 새정부의 농정방향 등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라디오 21세기 특별기획 전화인터뷰 녹음, 방송 :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민영 농어민신문 사장, 장관실 - 쌀 수급사정과 전망, 제2 UR대책, 쌀 자급대책 등

일시	주요 업무 추진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환경농업정책 방향 - 농촌지도소장 170여명 참석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대학원 '98 안보과정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WTO/IMF 시대에 대응한 농업정책 방향 - 군인·공무원 등 179명 참석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정책진단 녹화(최정광 해설위원), 방영 :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부채문제, 농업경영자금지원, 직거래 등 유통개혁, 식량 자급대책, 42조 농업투자의 효율성, 수출확대, 친환경농업육성 등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뉴스 부활 10주년 축하연 참석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 산업대학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WTO/IMF 시대 주요 농정방향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정영주 발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농정방향, 친환경농업의 개념, 무역진흥대책팀의 성과,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 밀레니엄 라운드 대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이터 통신 인터뷰(허재범기자, 장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시대의 농정방향, 미국·호주 등의 신용공여현황, 주요 가공·사료용 곡물, 축산물 수입전망, 중국의 바터거래제안, 식생활의 변화추이 등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WTO/IMF시대에 대응한 농업정책방향 -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46명 참석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자연대학원 고위 자연자원 정책과정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 WTO/IMF시대에 대응한 농업정책방향 - 고위 자연자원 정책과정 수강생 60여명 참석

나. 농정조직 운영 활성화

일시	주요 업무 추진
'98.3.12 3.16 3.30 4. 1 4. 8 4.14 4.28 4.30 5.12 5.14 5.25 6. 3	<p>< 역대장관 및 실무직원들과 대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장관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장관 14명에게 신임인사 및 주요 농정 방향을 설명하고 많은 조언과 협조 당부 ○ 기획관리실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명, 과천구단지 ○ 농정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명, 국무위원식당 ○ 식량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명, 국무위원식당 ○ 유통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명, 국무위원식당 ○ 농산원예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명, 국무위원식당 ○ 축산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명, 국무위원식당 ○ 개발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국무위원식당 ○ 비상기획관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명, 국무위원식당 ○ 통계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명, 국무위원식당 ○ 국제국 소속 계장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명, 국무위원식당 ○ 농정국직원(6~7급)들과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 국무위원식당

일시	주요 업무 추진
	<p data-bbox="305 331 572 376">< 미담사례 ></p> <p data-bbox="196 436 1411 1041"> 3. 5 ○ 장관취임 축하화분(200여개) 양로원 및 농민단체 전달 ※ 장관이 교양서적 “소중한 만남” 50여권을 개인적으로 구입 간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헌신한 류달영 박사의 정신을 본받게 함. ※ 중국파견 공무원에게 중국관련 논문 및 저서 기증하여 중국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 사회복지재단 등 불우이웃과 결연하여 후원금 지원(매월) - 농림부 직원 100여명 참석 - 음성 꽃동네, 한국복지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등에 후원금 전달 </p> <p data-bbox="196 1086 1411 1355"> 4.25 ○ 실업자돕기 바자회 참석 - 국민회의 개최 바자회(4.25~26)에 장관소장 유기그릇 1세트, 액자 1개 기증 - 중앙일보 개최 잠실 탄천바자회(매주 토요일)에 장관양복 1벌 기증 </p> <p data-bbox="196 1411 1199 1579"> 5. 8 ○ 어버이날 효행공무원 발굴 장관포상 - 농림부장관 포상 : 환경농업과 김병천 - 보건복지부장관 포상 : 농검 문경출장소 김철영 </p> <p data-bbox="196 1635 1411 1680"> 5.12 ○ 농업공무원교육원에 장관님 소장 ‘경세제민’ 대형액자 기증 </p> <p data-bbox="196 1736 964 1848"> 5.14 ○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 - 기독교신우회 회원 등 총 54명 참여 </p> <p data-bbox="196 1892 1293 1937"> 6. 6 ○ 장관소장 서화 30여점을 농업공무원교육원에 기증 </p>

일시	주요 업무 추진
	<p data-bbox="307 344 832 389">< 기타 조직운영 활성화 ></p> <p data-bbox="197 456 1307 555">3. 6 ○ 국장실 여직원 감축 배치 - 국장 1인당 여직원 1인 → 국장 2~4인당 여직원 1인</p> <p data-bbox="197 607 1345 757">3.18 ○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실시(3.18~4.15) - 청사(4,896), 방조제(9), 저수지 및 제방(38개소) 점검 및 보완조치</p> <p data-bbox="197 808 1412 965">4.20 ○ 이달의 농림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 매월 2~3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p> <p data-bbox="197 1016 895 1061">5. 2 ○ 자문관 임명(서종혁, 황장수)</p> <p data-bbox="197 1113 1361 1263">5. 6 ○ 정기 보안감사 실시(5.6~28) - 농·축협, 농유공, 농진공, 농경연 등의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p> <p data-bbox="197 1314 1287 1413">5.16 ○ 5월의 농림공무원 선발 - 김영만 시장과장, 축산경영과 박홍식, 농진청 정완태</p> <p data-bbox="197 1464 1292 1787">5.29 ○ 알뜰살림운동 전개 - E-mail 사용, 자동이체 등 전화요금 절약 - 중식시간 소등 등 전기·수도요금 절약 - 아크릴명패 제작으로 비용절감 - 소액시상금은 “우리농산물 상품권”으로 대체 - 해외출장 비행좌석 등급 하향조정 등 출장경비 절감</p> <p data-bbox="197 1839 1208 1937">6. 3 ○ 여성정책담당관을 외부전문가로 공개채용, 임명 - 박성자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소장</p>